

Left21.com

제54호 | 2011년 4월 9일 ~ 4월 22일 | 값 1,800원

레프트21

더는 빼앗길 수 없다

등록금 인상 철회! 최저임금과 임금 인상!



요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와중에 줄어드는 소득과 무섭게 치솟는 물가 속에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마트 가서 물건 하나를 집고 나서도 두 번 세 번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노동자들의 울화통을 터뜨리게 하는 뉴스가 많다. 지난 1년간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 가량이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 고위공직자 열 명 중 일곱 명의 재산이 늘어났다. 이명박의 재산은 1년간 4억 넘게 늘었다.

이뿐 아니다. 30대 기업이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3년 전에 견줘 73.3퍼센트나 늘었다.

반대로,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해 59.2퍼센트로 2004년 이후 가장 낮아졌다. 노동소득분배율은 5년 연속 줄었을 뿐 아니라 지난해 감소폭은 36년 만에 최대치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들의 몫을 빼앗아 자본가들의 몫을 늘렸다는 것을 통계 수치가 증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 폭등과 전월세 대란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몇 배로 늘리고 있다. 그래서 <조선일보>조차 “인플레이를 잡지 못하면 빈부 격차가 확대될 뿐더러 계급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다”, “폭등하는 전·월세금이 집 없는 사람들의 ‘계급의식’을 자극하면서 체제에 등을 돌리도록 떠밀고 있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자기들 몫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 정운찬의 전혀 급진적이지 않고 보잘것 없는 초과이익공유제조차 “공산주의”라며 반발하는 저들을 보라. 자본가들의 모임인 경총은 올해 임금 인상

률 가이드라인으로 고작 3.5퍼센트를 제시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만 합쳐도 9퍼센트가 넘는데 말이다.

따라서 최근 이화여대, 고려대 등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점거파업을 통해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임금인상을 얻어낸 것은 의미있다. 일부 대학에서 몇 년 만에 학생총회가 성사되고 등록금 인상에 맞선 점거농성이 시작된 것도 고무적이다. 서로 자극하며 상승 작용하는 이 투쟁들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보여 준다.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은 이 투쟁들이 열어 준 공간을 이용해 더 큰 투쟁을 발전시켜야 한다. 등록금 인상 저지와 임금 인상을 위한 더 많은 점거와 투쟁을 건설하고 투쟁들을 서로 연결시켜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주요 요구인 메이데이에는 권역별로 분산하지 말고 서울로 집결해서 대규모 시위를 벌여야 한다.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서도 정치적 중심지인 서울로 결집하는 게 맞고,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도 서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메이데이 때 이 나라의 정치적 중심지에서 대규모로 결집해 시위를 벌인다면 그것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물가 폭등에 맞서는 더 많은 투쟁들을 고무할 것이다. 그 여세를 몰아 각 노동조합들은 시기를 집중해서 대대적인 임금 인상 투쟁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야 한다.

집권여당 내에서도 ‘이명박 탈당’ 얘기가 나올 만큼 이 정부의 레임덕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지금이 우리에게서 기회다.

▶ 관련기사 3, 16면



누구의 말을 알아야?

“당신을 사랑한다. 나로 인해 당신의 이미지가 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카다피가 서방 폭격 개시 이후
오바마에게 보낸 편지

“대통령 한 사람 편하자고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다음 세대까지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을 해버리자고 생각하기엔 책임있는 대통령으로 저는 할 수 없다.”

신공향을 뒤집은 이명박,
4대강은 어떡하고.

“방사능 낙진에 관한 근거없는 소문이나 비과학적인 억측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다.”

보름 만에 무너진
이명박의 거짓말

“[일본발 핵공포에] 정부가 ‘전문가 말 믿으라니까’라는 식으로 뻔대다가는 광화문 거리가 또 촛불로 뒤덮일지 모른다.”

〈조선일보〉의 두려움

“교보문고의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 보면 좌파 서적뿐이다. ... 우파는 내년 대선전(戰)에서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조선일보〉의 한탄

“그래도 우리는 간다. ... 오히려 ‘명품 원전’이 필요한 때”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

“경쟁도 좋지만 열정과 창의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게 대학 존립의 목적이다.”

〈중앙일보〉사설, 대학평가
종합순위를 발표하는 신문이...

“일본의 독도에 관한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는 ... 말보다 행동이 필요할 때”

자위대 창설 한국 행사에
참가한 바 있는 나경원

“대한민국은 북핵을 견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핵개발로 맞받아쳐야 한다.”

일본을 보고도 계속되는
〈조선일보〉김대중의 망발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ABC뉴욕제과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대편 롯데백화점 앞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름책방(대 학교), 녹두(동국대후문),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 온라인

레프트21 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레프트21〉판매자 벌금형 5차 재판

언론 자유를 위해 당당히 법정투쟁할 것이다

1년 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지방선거를 빌미로 진보적 주장과 비판을 억압했다. 그러나 우리는 거리에서 굽힘 없이 〈레프트21〉을 판매하여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반서민 정책을 폭로하고 비판했다.

결국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신문 판매를 미신고 집회로 몰아 강제 연행하고 처벌했다. 이에 맞서 우리는 대책기구를 꾸리고 법정 투쟁에 나섰다.

우리의 투쟁은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투쟁 현장에서 수많은 노동자와 학생 등이 지지를 보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재판 비용을 모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고, 주요 언론 단체들이 우리를 방어하는 의견서를 냈다. 정당과 노동·언론·시민단체 등의 대표들, 국내외 진보적 교수들도 항의 서명을 했다. 덕분에 우리는 자신감 있게 투쟁에 나설 수 있었다.

지난 재판들은 검찰과 경찰의 위선이 드러난 과정이었다.

검사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모면하려고 우리가 판매가 아니라 ‘미신고 집회’를 했

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 비판적인 신문의 판매를 탄압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 검사는 재판에서 〈레프트21〉의 내용을 문제 삼으며 본색을 드러냈다.

그나마 우리가 ‘집회’를 했다는 증거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신문 형식의 유인물’은 찾을 수 없었고, 경찰이 왜 현장에서 압수하지 못했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검찰의 억지 기소는 좌파를 위축시켜 대중적 저항을 막으려는 꼼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동참하자!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이 진행 중이다. 4월 26일까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의 1퍼센트(약 10만 명)가 청구하면 서울시의회에 안건 발의 할 수 있다. 곧 서명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시급하다.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학생 인권과 학생생활지도가 서로 대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경기도에서도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있다.

이런 현상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억압적 구조가 강하게 남아 있는 우리 나라 교육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인권 교육 강화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더 절실하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 싫다. 학교원은 더 가기 싫다. 지금까지 만 난 백여 명에 가까운 선생님들 중

에 좋아할 만한 선생님이 한두 명도 안 된다고 한다. 건조주의보가 있으니 불조심하라고 훈화를 하면 학교가 불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답하는 학생이 많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왜 이렇게 학교와 교사를 싫어하고, 학교에서 불행한지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

신체 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이에 1인당 한 평도 안 되는 교실에서 딱딱한 책상에 앉아 대어섯 시간을 정숙하게 지내야 하지만 원래 그런 것인 줄 안다. 단 몇 분이라도 본성이 살아나 뛰거나 큰 소리를 내면 선생님한테 ‘이 새 X, 저 X끼’ 욕 들으며 ‘지도’를 받지만 당연한 줄 안다. 머리카락에 약간 변화를 줬다가 귀밑머리가 잡혀서 끌려 다녀도 원래 그런 것인 줄 안다. 사소한 실수에도 다른 학생들 앞에 불러 나가 모욕을 당해도 원래 그런 것인

줄 안다. 어린 학생 때부터 지시에 복종하는 법만 배웠기 때문에 교사와는 다른 의견을 표현하면 ‘개기는’ 아이 취급 받는 게 당연한 줄 안다.

빠앗기고도 빠앗긴 줄 모르는 인권을 톡 던져 놓고, “거 봐라! 혼란스럽지? 학생들은 아직 받아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학교에서는 생활지도부장(학생주임)보다 학생인권홍보부장을 새로 만들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통제와 감시라는 지도 방법이 익숙한 교사들도 토론과 배려의 지도 방법을 새롭게 익혀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자치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면 학생들은 빠르게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조례도 학생들 자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우리를 옹호했고 공개적으로 신고 행위를 사과했다.

여전히 이명박 정부는 위기를 민주주의 탄압으로 모면하려 한다. 최근에도 ‘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 ‘자본주의 연구회’가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우리의 투쟁은 반민주적 공격에 맞선 전체 운동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오는 4월 14일 5차 재판이 열린다. 이번 재판에는 검찰 측과 우리 측의 증인이 나온다. 이날이 결심 공판이 될 수 있어 우리 6인은 최후 진술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다.

민주와 진보를 지향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연대를 바란다.

김지태 〈레프트21〉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

〈레프트21〉판매자 벌금형 5차 재판

4월 14일(목) 오후 2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2,3호선 교대역 10번 출구)
판사 : 형사22단독 신교식 판사

이렇게 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 블로그와 이메일로 지지 메시지를 보내 주세요

블로그 http://support6.tistory.com, 이메일 support6@jinbo.net

● 소송비용과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은행 1002-337446-442 (신명희)

후원 웹 페이지 http://www.left21.com/B_support.php?from=support6

플라주 ④8

플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의 자주적 활동과 조직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장은 조례 제정 주민 발의 청구인 모집이 급하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의 웹사이트(http://www.sturightnow.net 전화 08-582-8884)에 접속

해서 서명용지를 받아 자필 서명 후 수신인부담으로 발송하면 된다. 수임인이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서명을 받는 운동도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에 적극 동참하자.

김성보 전교조 조합원 용곡중 교사

중앙대의 악랄한 학생 재징계

“오너의 뜻에 따라” 학생을 두 번 내쫓는 학교

중앙대학교 당국이 법원도 부당하다고 판결한 학생 징계를 다시 추진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대 당국은 비민주적인 대학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한 학생 세 명을 퇴학시키거나 무기정학시켰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학생들은 이번 학기에 복학을 했다. 그런데 중앙대 당국이 또다시 그 학생들에게 무기·유기 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학교 당국의 재징계 결정은 지난해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복학한 노영수 씨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었다. 어쩔사리 등록금을 마련해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것이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자신의 경솔한 판단을 반성하지도 않고 또다시 저희를 학교에 뒀 다니게 했습니다.

“최근 학교에서는 가중처벌을 해 징계 양을 늘리겠다는 말도 나

왔어요.”

학교 당국은 학생들이 재징계에 반대해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징계가 내려진 지속 기간 동안 개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추가징계는 불가피하다.”(서울캠퍼스 김남원 학생지원팀장)

학교 당국은 지난해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노영수 씨에게 손해배상 2천5백만 원을 청구한 상태이기도 하다.

노영수 씨는 두산 재벌이 중앙

대를 장악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산이 중앙대를 인수하면서 전제 조건이 총장을 임명제로 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기업식으로, 박용성 회장 한 명을 중심으로 위계화된 조직 개편을 하고 있어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오너의 뜻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집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런 탄압이 학교의 억지스럽고 무리한 행동이라고 보

는 경향이 커요.

“징계를 받은 친구들과 함께 올 여름에 저희도 두산자본을 규탄하는 제2회 3로 1배를 할 계획이구요. 같은 재벌 밑에서 고통받는 노동조합과도 함께 투쟁할 겁니다.”

고려대학교 출교생들도 끈질기게 투쟁하며 광범한 연대를 건설해 학교 당국의 탄압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다. 중앙대 학생들의 투쟁도 승리할 수 있도록 투쟁과 연대가 커져야 한다.

정선영

대학 청소 노동자 투쟁

최저임금을 넘는 임금 인상을 이루다

박설

청소 노동자들이 강력한 투쟁으로 대학 당국을 무료 쫓리며 법정 최저임금을 넘는 임금 인상을 따냈다. 이화여대·고려대·고려대병원에선 시급 4천6백 원으로 협상을 타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직 점거파업 중인 연세대에서도 이 정도 수준은 가능해 보인다.

임금 인상률은 이화여대·고려대가 각각 9.5퍼센트, 11.92퍼센트다. 고려대 노동자들은 두 자릿 수 인상률을 거머쥐었다. 애초 요구인 5천1백80원을 따내진 못했지만 말이다.

많은 대학 당국들이 한사코 법정 최저임금 만큼만 임금 인상을 허용해 온 것에 비춰보면, 이번 투쟁 결과는 분명 진일보다.

“그렇게 일하고 1백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나면 허탈하죠. 빈잔값을 줄이고 줄여도 물가가 너무 올라 생활이 힘들어요.” 청소 노동자들은 ‘생활 임금 보장’이라는 절박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에 나섰다.

이들의 임금이 얼마나 오르느냐 하는 문제는 내년 법정 최저임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고리였다. 노동자들이 따낸 4천6백 원은 곧 있을 협상의 최저점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성과의 비결은 뭘니 뭘니 해도 강력한 투쟁이다. 이화여대·고려대 노동자들이 강력한 점거파업을 벌이자, 학교 측은 사나흘 만에 뒤로 물러섰다. 박명석 공공노조 서경지부 지부장이 말한 “서경지부의 특기”, 즉 점거가 효과적인 방식이었던 것이다.

투쟁 초기에 시한부 파업과 태업을 벌이며 협상 가능성을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다 함께’ 등 학생 활동가들의 점거파업 제안에 자신감을 얻어 이 같은 투쟁을 결정했다.

한편, 이번 투쟁의 또 다른 중요한 동력은 바로 학생들의 연대에서 나왔다.

대학 당국들은 ‘임금 올리려면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 ‘파업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 본다’ 등의 논리로 노동자·학생을 이간질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오히려 무려 4만여 학생들이 파업을 지지했다.

노동자들은 이런 학생들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말했다.

사랑

고무적이게도 고려대·이화여대에선 노동자 파업이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과 연결됐다. 특히 고려대 노동자·학생 투쟁은 환상적으로 결합됐다.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3월 31일에 학교가 들썩일 거예요. 학생들의 등록금 시위가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자리에 꼭 갈 겁니다. 총장이 얼마나 똥줄 타겠어!”

노동자들은 3월 29일 점거파업을 시작했고 바로 이틀 뒤 학생들은 총회를 성사시키고 점거 농성을 결정했다. 이에 놀란 대학 당국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학생 총회가 성사된 바로 그날 사측은 시급 4천6백 원 인상안을 내놔다.

이처럼 힘이 최고조로 강력해졌을 때 추가 성과급 요구를 포기한 것은 아쉽지만, 노동자들은 민주적 토론을 통해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타결했다. 공공노조 서경지부 지도부는 옮겨도 요구안 결정 과정에서 분imoto를 진행했다.

처음에 투쟁은 네 곳에서 공동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연세대만 남았다.

지금 연세대 총장은 자신이 직접 나서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노동자·학생들을 갈라놓으려 한다.

그러나 총학생회 등을 비롯한 학생들

은 여전히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있고, 대학 당국이 대학원생들에게 청소 일을 시키려 한 것도 반발을 사고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점거파업을 단단히 유지하고 학생들과 노동·사회단체 등으로 연대를 확대하면, 고소·고발 협박에 대한 사측의 사과와 파업 기간 중 임

금 보장 등까지 따낼 수 있다.

대학 청소 노동자 투쟁은 올해 임금 인상 투쟁의 기록제가 됐다. 언론들도 “청소 노동자들의 연쇄 파업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물론, 민주노총이나 공공노조 서경지부 지도부가 일찍부터 세 대학의 공동 점

거파업을 조직하며 대학 밖으로 연대를 확대했다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은 있다.

민주노총 등은 지금의 열기를 모아 연세대에서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최저임금·정규직 임금 인상 투쟁을 더 강력하게 건설해야 한다.



노동자·학생 단결은 투쟁의 원동력 3월 29일 고려대 청소 노동자와 학생들이 점거파업 승리를 결의하며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최저임금을 25퍼센트 인상하라

최근 민주노총 등이 ‘최저임금연대’를 구성하고 현행보다 25.5퍼센트 오른 시급 5천4백10원의 법정 최저임금을 요구하자, 재계·정부가 터무니없는 악선동을 하고 있다.

경총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량 해고를 낳는다’며 임금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주장한다.

그러나 ‘해고는 살인’이라고 울부짖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한다”고 독설을 내뱉던 자들이 이제 와서 대량해고를 걱정하는 척 위선을 떠는 것은 역겹다. 더구나 경제 위기 직후 최저임금 인상이 폭락했던 바로 그 때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거 해고됐다.

<한겨레>의 지적처럼 “시간당 최저임금 5천4백10원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이렇게 돼도 일주일에 꼬박 52시간 넘게 일해야 겨우 한 달에 1백13만6백90원을 벌 수 있다.

이 돈으로는 일주일에 두세 번 고기를 구워 먹고, 몸이 아프면 마음 편히 병원에 가는 등의 기본 생활을 누리기도 힘들다. 지금처럼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선 끝없는 적자인생을 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인간다운 삶을 불가능하게 하

는 현행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올해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은 당연하고 반갑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쟁취하려면 ‘노동자전선’의 주장처럼 “실질적인 전국 투쟁”을 조직해야 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최저임금 인상 투쟁의 디딤돌이 된 청소 노동자 투쟁에 더 적극 뛰어들어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민주노총 중앙이 투쟁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고] ... 투쟁 조직화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이정호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의 평가를 곱씹어야 한다. 최저임금 투쟁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를 주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정규직의 임금이 너무 높다”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 점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2007년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행한 양보 교섭 사례를 소속 노조들에 권한 것은 격정스럽다. 정규직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쓰자며 파업을 철회한 보건의료노조의 사례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안 그래도 ‘정규직’의 연대가 잘 안 된다’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

최저임금 투쟁에 정규직의 연대를 더하려면, 정규직·비정규직 공동의 이해관계를 강조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왜 전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설득해야 한다.

예컨대, 2009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대폭 낮아져 2.75퍼센트로 결정됐을 때 전체 노동자 임금 인상률도 1.7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역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12.6퍼센트로 높게 결정된 2000년엔 전체 노동자 임금 인상률도 7.6퍼센트로 비교적 높았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임금 인상 요구안도 확정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의 대폭적인 임금 인상 요구는 사회진보연대 등이 옮겨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 투쟁과 정규직 임금·단체협약 투쟁의 결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금속노조가 정규직의 기본급과 비정규직 임금을 모두 15만6백11원 인상(전체 금속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9퍼센트 인상)하라고 요구하며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을 꾀한 것은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세대 청소 노동자 이남이 씨(67세) 인터뷰

“우리의 힘이 대단한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 나는 전면 파업에 들어가도 길어 봐야 3월은 안 넘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4월이 됐잖아요? 이제 쓰레기장 아닌 건물이 없어요.

다른 학교는 다 타결됐는데, 여기는 학교와 용역업체의 처사가 너무해요. 총장이 학생들에게 보낸 [파업 비난] 메일을 봤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이 분했어요. 어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비인간적이에요.

자기도 청소복 입고 청소 한번 해보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러면 우리 심정을 1백분의 1이라도 이해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 달에 95만~96만 원을 받는데, 이것저것 떼고 나면 90만 원도 손에 안 들어와요. 손에 못 쥐어도 돈 1백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학교와 용역업체는 그것마저 안 해주고 있으니 답답하고 속상하죠. 학교가 저리도 용역업체랑 짜고 치는 것을 보면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파업이 좋다고 말하기는 뭣하지만, 파업하면서 좋은 점도 있어요.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파업하기 전에는 어느 건물에서 몇 명이 어떻게 일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 농성하다 보니까 서로 많이 알게 됐죠.

농성

또 학교가 지저분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느꼈어요. 우리 힘이 대단하다는 것도 느꼈어요. 학생들도 그동안 학교가 깨끗했다는 것을 새삼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학생들이 불평도 하지 않고 참아 주면서 항상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하고 말해 주니까 너무 고맙고 또 너무 미안해요. 빨리 해결해서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노조가 없는 분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노조를 결성해 자기 권리를 찾아 뽕뽕하게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노조가 있으니까 너무 든든해요.

정규직들도 나름으로 할 말이 있겠지만,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똑같이 평등한 세상이 되면 좋겠어요. 또 가난한 사람이 더 대접 받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어요.”

인터뷰·정리 김종환

이론과 실천의 동인을 지향하는
계간 **마르크스21**
9호(2011년 봄)
가격 : 16,000원

아랍혁명 특집호 세계를 뒤흔드는 아랍 혁명 — 의미와 전망

아랍 혁명의 귀환 _ 알렉스 캘리니코스
이집트 혁명의 제1막 _ 필립 마플릿
독재 정권의 무덤을 판 사람들 _ 앤 알렉산더
튀니지의 민중 혁명 _ 샴세디네 므나스리
리비아 혁명, 어떻게 볼 것인가? _ 김하영

정점:
다시 불거지는 유럽 재정 위기 _ 이정구

아랍 민족주의의 부상과 좌절 _ 앤 알렉산더
나세르에서 무바라크까지 _ 에릭 루터
이집트 민주화 운동 _ 라발 엘 마흐디
이슬람주의의 과거와 현재 _ 사메 나기브
21세기 혁명의 현실성을 보여 준 아랍 혁명 _ 김인식

마르크스주의의 고전 읽기: (프랑스 내전)
파리 코뮌, 최초의 노동자 국가 _ 이현주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정기구독료
1년 64,000원 | 2년 120,000원 | 3년 180,000원 | 5년 300,000원 | 7년 420,000원 | 10년 600,000원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새로
나왔습니다

진보대연합 논쟁

정치적 차이와 독자성을 인정하며 연합해야

민주노동당은 4월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진보정치 대통합 방안을 결정했다. 핵심 쟁점은 범야권연합 문제와 북한에 대한 태도 문제였다.

최종 의결된 문안은 “민주당을 밀어주는 ‘묻지마 야권연대’도 안 되고, 반 MB한나라당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범야권연대 원천 부정도 곤란하다”와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정세와 사실을 고려하여 북을 비판할 수도, 지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3월 27일 진보신당 당대회 결정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진보신당은 당대회에서 “북한의 핵 개발 문제, 3대 세습에 반대”하고 “민주당 및 국합당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연합정부론’은 … 진보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 하고 결정한 바 있다.

진보신당 당대회 후 언론들은 “진보대통합이 ‘안갯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경향신문》), “빨간불”(《한겨레》)이라고 보도했다. 진보신당의 독자파가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결정해서 사실상 진보대통합을 거부했다고 분석한 것이다.

물론 진보신당 독자파가 사실상 민주노동당과 통합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진보신당 당대회 결정 자체는 문제 삼기 어려운 점이 있다.

진보정당이라면 마땅히 진정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핵무기와 핵 자체에 반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의 핵 개발과 3대 세습에 반대하는 입장을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자주파에 대한 ‘종북’ 마녀사냥에 동조하거나 남한 체제에 대한 지지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다.



3월 27일 진보신당 당대회는 진보대통합의 쟁점을 날카롭게 드러냈다. 진보신당의 분열 위기는 역설적으로 공동전선 방식의 진보대연합이 더 단결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가 노동계급의 독립적인 정치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자본가 정당과의 연립 정부를 거부하는 태도도 올바른 것이다.

진보대통합을 위해서 이런 정치적 입장을 후퇴시키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번 진보신당 당대회의 ‘강경한’ 결정은 진보 양당 지도부의 행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로 모든 선거에서 ‘묻지마 야권연대’를 추진해 왔다. 이정희 대표는 민주당과 ‘연합정부’ 구상을 암시하는 발언을 거듭해 왔다.

그래서 전북 전주에서 녀 딸째 버스 노동자들이 민주당 소속의 도지사와 시장의 탄압에 맞서 싸우는데도, 민주노동당 중앙당은 민주당에게 단 한마디도 쓴소

리를 하지 않았다.

또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북한의 3대 세습에 관해 “북한의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9.29 대변인 논평)라고만 언급해 실망을 줬다.

진보의 재구성

진보신당 독자파는 이와 같은 민주노동당 지도부에 대한 정당한 우려에 기반해 당대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진보대통합이 민주대연합의 사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크다.

여기에 심상정 전 대표 등 진보신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무원칙한 연합정치를 주장하는 것도 반감을 불러 일으키며 독자파의 입김이 커지는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배경을 감안해도 진보신당

독자파가 민주노동당 지도부를 핑계로 진보적 대중의 단결 염원마저 외면하는 것은 문제다. 일부는 민주노동당이 더는 진보정당이 아닌 것처럼 주장해 사실상 진보대연합 자체를 반대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진보대연합을 지지하면서 그 속에서 진보대연합이 민주대연합의 사전 단계로 변질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올바른 길이다.

사실 진보신당 독자파 리더들은 “진보의 재구성은 일단 실패”했다는 조승수 대표의 솔직한 고백을 인정해야 한다. ‘종북주의’ 반대만으로 차별화된 실천을 만들 순 없다.

이들은 민주노동당 시절 추진했던 사회현대전력(노동자 양보론)을 이어갔지만, 그런 온건 노선으로는 경제 위기 속에서 뚜렷한 대안도, 진보의 재구성도 이

를 수 없었다.

진보신당 독자파는 당 대회에서 “2011년 9월 전후 시기까지 …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의하는 세력들과 함께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한다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수용하기 힘든 기준을 제시해 통합 거부의 책임을 민주노동당에게 떠넘기고 사회당 등과 소통합으로 정치적 생존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3월 29일 진보대통합 연석회의에 참여한 대표자들의 합의문이 문구 그대로 “아래로부터의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운동”을 불러일으키긴 힘들어 보인다.

진보 양당이 공통점도 많지만, 쉽게 합의하기 힘든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3년 가까이 독자 정당으로 존재하면서 그 차이는 더 분명해졌다. 이 때문에 《레프트21》과 다함께는 단일 정당 방식이 아니라 공동전선 방식의 진보대연합을 주장해 온 것이다.

각 정치세력의 독자적 선전·비판·조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 구체적인 10~20개의 행동 강령을 중심으로 공동전선 방식의 단결체를 만들어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중투쟁 건설을 중심 과제로 해야 선거주의적 양보와 후퇴 압력에도 덜 취약할 것이고, 단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연립정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후퇴시키며 연합하라는 잘못도, 북한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연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잘못도 피할 수 있다.

김문성

일본 핵재앙의 공범

이윤 논리에 찌든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이와테현 북부에 있는 인구 3천 명되는 어촌 마을은 이번 지진 해일로 말미암은 사망자가 실종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건설 초기에 ‘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은 15미터의 제방이 해일을 막았기 때문이다.

핵 재앙을 초래한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있는 일본 동북부 지역은 평소 지진과 해일이 잦은 곳이다. 일본 자민당이 추진하고 민주당이 계승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 지역을 예상되는 자연재해조차 막아 낼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다.

이번 재앙은 핵발전소가 ‘안전하고 깨끗’하다며 핵발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 온 일본 정부와 이윤에 눈이 멀어 기본적인 안전 설비조차 마련하지 않은 도쿄전력의 거짓말이 불러 온 인재다.

이 결과에 책임져야 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고 직후부터 사실을 은폐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거짓말

지금도 언론 통제 때문에 관련 사실은 ‘인터넷과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일본 전기사업연합회는 한 TV시사 토론 방송에 연락해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인사를 출연시키지 말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로 연일 빈축을 사고 있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



북구 작업 중인 도쿄전력 노동자들 이번에도, 사고는 자본가들이 치고, 책임은 노동자들이 진다.

력은 핵발전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탄압하는 데는 신속하게 대응했다. 경찰청은 ‘햇소문과 억측’을 빌미로 인터넷에 게시되는 관계 기관 이외의 정보를 단속하기 시작했고 정부와 도쿄전력을 규탄하는 평화적 시위대를 연행하는 등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1원전에 고여 있는 저농도 오염수 1만 1천5백 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며 이를 “승인했다.”

도쿄전력은 평소 준비해 둔 선량계(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기계) 5천 개가 해일로 유실돼 3백20개만 사용 가능한 데도 노동자들을 무방비 상태로 3주 넘게 북구 현장에 투입했다.

지난 3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쿄

전력 측은 북구 작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위험 수당을 증액할 예정은 없다는 물음에 “현재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가 여론을 의식해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하고 정정했다.

지금도 배고픔과 누적된 피로, 무엇보다도 피폭의 공포 속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도쿄전력이 보여 준 방화함은 사람보다 이윤이 우선시되는 체제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수많은 핵발전소 사고를 은폐하고 이번 사고에도 돈줄인 핵발전소 사수에만 혈안이 돼 초기 대응에 실패한 도쿄전력, ‘국가 비상 사태’라면서도 “폐를 끼치고 있는 것은 도쿄전력”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일본 정부, 이들이 모든 피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최미선

핵발전과 자본주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수습되기는커녕 더 악화하면서 장기화하고 있다. 핵발전소에서 새어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될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1만 1천5백 톤을 바다에 버리면서, 소금이나 조개·고등어·오징어 등 해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게다가 한국에서 나출째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양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 비가 내리면 방사성 물질들이 수돗물과 다양한 식품들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근시안

상황이 이런데도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이명박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근에서 생산된 채소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로 생색을 내려 하지만, 이 채소들은 예전부터 한국에 수입된 적도 없다는 게 곧 밝혀졌다.

반대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식품 중 99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식품첨가물 등에서는 세습이나 요오드 같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나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는 지배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건강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핵발전소에 투자된 엄청난 돈을 잃을까 봐 초기 대응

에 미적대면서 사고를 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핵발전을 계속 유지·확대하려는 각국 정부의 술책은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여 준다.

핵발전은 사고가 났을 때 막대한 환경 파괴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 뿐 아니라 핵연료를 채굴하고 그 폐기물을 보관할 때도 환경이 파괴된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가 환경파괴의 위험을 무시하거나 기꺼이 감수하는 것은 분명 더 많은 부를 더 빨리 쌓으려고 경쟁하는 자본가들이 노동하는 다수 인민을 착취하는 체제라는 점과 관련 있다.

상품을 더 싸게 생산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야 한다는 논리는 자연자원을 최대한 값싸게 사용하고 그 대가를 가능한 많이 사회 전체에 떠넘기는 것과 자연스레 한쪽이 된다.

핵발전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높은 위험성은 기만·위선으로 은폐되고 그 진정한 대가는 잘해 봐야 후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어느 곳에서나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식의 근시안적 사고가 판을 치지만, 이런 근시안적 사고야말로 자본주의 경쟁의 본질이다.

자연을 당장의 이윤을 위해 ‘수탈’해야 할 자원으로만 보는 체제가 아니라 보호·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다른 체제로 대체해야만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협하는 재앙을 피할 수 있다.

강동훈

정권에 대한 반감이 표출될 4·27 재보선

최미진

4·27 재보궐 선거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예비전이 되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도 지난해 지방선거처럼 반이명박 정서가 표출되는 장이 될 듯하다. 지난 1년간 이명박에 대한 반감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물가가 사상 최대로 치솟으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고스란히 깎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교육비를 줄이고, 고기 대신 두부를 먹으면서 생활 수준을 낮추고 있다. 전월세 값 폭등으로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업을 압박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는 물가 인상을 방관했다. 정부 자신이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물가와 등록금, 전셋값 인상을 부추겼다.

노동자·서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을 동안, 고위 공직자들은 부동산·주식 ‘대박’으로 재재를 불렀다. 고위 공직자의 69.2퍼센트가 재산이 늘었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무려 2백 68억 여 원에 이른다.

이런 불평등을 만들어 낸 정부에 대한 분노가 지금 이명박이 겪고 있는 레임덕의 배경이다. <조선일보> 김대중은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현상을 감안하고 국민의 욕구와 불만의 정도를 고려한다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한다.

정권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워낙 커서 한나라당 인사들조차 선거를 앞두고



사진 제공 민주노동당 울산지역

4·27 재보선 후보단일화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울산지역 야당 후보들
반이명박 정서에 공감해야 마땅하지만, 계급연합이 이명박에 맞선 투쟁에 미칠 악영향에 눈 감아선 안 된다.

이명박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김해(을) 한나라당 후보 김태호는 ‘도움이 안 된다’며 중앙당의 지원을 거절했다. 신공항 계획 철회를 계기로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이명박에게 탈당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이명박과 거리 두기를 한다 해도, 이번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후보들은 죄다 반동적이다.

최대 격전지인 분당(을)에 출마하는 강

재섭은 한나라당 대표 출신으로 한나라당의 우파적 정체성의 화신이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현재를 지키는 법이라면, 사립학교법은 미래를 지키는 법”이라면서 ‘4대 개혁입법’ 중 하나였던 사립학교법 재개정 원천무효 운동을 주도했다. 2008년 예는 촛불시위를 “해충과도 같은 존재”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김해(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김태호는 온갖 비리 의혹과 추문으로 지난

해 8·8 “쓰레기 개각”의 상징이 됐다. 그런데 낙마한 지 1년도 안 된 자를 재활용할 정도로 한나라당은 오만하고 낮잡이 두껍다.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 엄기영은 일본 핵 재앙을 뻔히 보고서도 삼척에 핵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한다.

이런 자들의 집합소이자 반동적 정책으로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해 온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하길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야권연대가 한나라당 심판의 대안일까?

지긋지긋한 이명박 3년의 악몽에서 벗어나고픈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 심판을 위해 투표할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처럼 어느 정도 반MB정서의 수혜를 입을 듯하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과 복지에 대한 열망에 편승하려고 무상의료 등을 공약하며 이른바 ‘좌클릭’을 시도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좋아서 흔쾌히 투표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 대한 호감보다는 이명박에 대한 반감이 지금 대중의 주된 정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수의 개혁 열원 대중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패배를 위해 한나라당의 상대가 누구든 표를 던질 태세가 돼 있다. 우리는 이런 심정에 심분 공감하며, 한나라당이 보기 좋게 패배하길 바란다. 이것은 이명박을 레임덕 수렁에 더 깊이 밀어넣을 것이고, 이명박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진보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마땅한 대안이 없는 곳에서는 진보적 대중이 개혁적으로 여기는 민주당·참여당 후보

들에게 비판적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명박의 패배를 바라는 사람들의 심정에 공감하고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다. 어차피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는 원칙이 아니라 전술이기 때문이다.

선거공학

그러나 진보정당들이 반이명박을 이유로 민주당·참여당과 전략적인 선거연합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진보연대를 포함한 ‘시민4단위’는 진보정당들에게 민주당·참여당과 선거연합하라고 압박하는 구실을 자임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을 선거의 가장 중요한 전술로 여기고 있다. 진보신당은 최근 당대회에서 민주대연합을 비판하며 ‘독자노선’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추구하고 있다.

물론 야권 선거연합은 선거공학으로만 보면 대체로 한나라당 후보를 떨어뜨리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선거만 봐서는 안 된다. 현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반민주 정책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민주당과 전략적 선거연합은 이명박 정부와 정책에 맞선 투쟁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결림돌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반노동자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고 모순 투성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하고선 의료민영화의 상징인 제주 영리법인 설립을 지지하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식 ‘삽질 경제’에 반대한다면서 자신들이 집권하면 신공황을 짓겠다고 한다.

“전북의 여당”인 민주당은 전북 버스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경찰력을 투입했고, 민주당원인 전남도지사는 영산강에서 4대강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이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둔 친자본주의 정당이기에 나타나는 한계다.

이런 민주당과 계급연합하는 것을 우선하면 이명박에 맞선 투쟁은 발목이 잡힐 것이다. 민주당의 전북버스 파업 공격에 민주노동당 중앙당 지도부가 침묵한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당장 전북버스 노동자들은 민주당 손학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진보정당 지도부

는 손학규 지지 운동을 하게 되는 모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순

울산 중구에서 민주당과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진보신당 울산시당 지도부는 자신들이 세금체납과 탈세, 논문표절 의혹이 있다고 비판한 민주당 울산 중구청장 후보의 승리를 위해 공동선대본을 구성할 판이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진보정당의 대의와 정체성만 훼손되고 핵심 지지기반을 잃을 수 있다.

4월 2일 열린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김해의 한 중앙위원은 당 지도부가 민주당이 양보한 순천과 울산 동구만 꼭 당선시켜야 할 곳으로 꼽다 보니 김해에서는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연히 사퇴할 것으로 여겨져 지지율이 초기보다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아래로부터 투쟁을 건설하면서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아닌 독립적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 노동자·학생들이 임금인상·등록금 동결 투쟁에 나서는 상황은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에 좋은 기회다. 선거 공간은 이런 투쟁을 고무하고 뒷받침하는 장으로 이용돼야 한다.

울산 동구청장 선거

두 진보 후보의 대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갑용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울산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다. 민주노동당 김종훈 후보가 사실상 야권 단일후보로 결정된 직후다.

이갑용 후보는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동 탄압을 일삼은 민주당과 진보양당이 연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민중의 소리>는 이 점이 못마땅했는지 이갑용 후보가 ‘고춧가루 뿌리며 한나라당 도와주려 나왔다’는 식으로 비난 기사를 내보냈다가 사실 관계 정정 보도를 하기도 했다. 민주당과의 선거연합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그의 출마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이라든가 진보정당 소속이어야 지지할 수 있다는 정치 방침을 근거로 이갑용 후보를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선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갑용 후보는 현재 민주노총 지도위원이며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노조 징계 요구를 거부하다 구청장 직을 박탈당한 바 있다. 그런데 진보정당 소속이 아니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지지 후보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군색해 보인다.

진보진영의 단결

물론 이미 울산 진보진영 다수의 지지를 받는 민주노동당 후보가 있기 때문에 곤란했을 수 있다. 그 점에서 민주노총이 할 일은 두 진보 후보의 단일화를 중재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지금은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단일화 중재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김종훈 후보를 유일한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공표했기 때문에 단일화 촉구는 이갑용 후보에게 사퇴하라는 뜻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갑용 후보가 출마 이후 한나라당 비판보다 민주대연합을 이유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비판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은 아쉽다. 누가 진정한 적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는 분별 있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못 믿을 자본가 정당인 것은 맞지만, 지금 야권 단일 후보는 민주노동당 후보이고, 이 선분이 민주당 때문에 불필요한 타협을 하거나 실책을 한 것은 아직까지 없어 보인다.

가장 좋은 것은 울산처럼 진보정당들의 세력이 강한 곳에서 진보진영이 단결해 한나라당에 맞서며 민주당과 다른 진보적반MB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실 두 후보의 기본적인 강령과 공약, 선거운동 방식이 단일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것도 아니다.

단일화가 된다면, 이번 선거에서 진보 후보에게 투표하고, 이후 이명박에 맞선 투쟁에 나서려던 노동자들이 두 후보의 경쟁을 보면서 느끼는 곤혹스러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김문성

중동 혁명 환경 문제 역사 이론 3가지 주제를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조명하는 연속 강연

해외 마르크스주의 학자 초청 강연

일시 : 5월 22일 (일) 11시 ~ 6시 | 장소 : 서울 (추후 공지)
주최 : 다함께 | 문의 : 02-2271-2395

11:00 ~ 12:50 **아랍 혁명의 성격과 전망**
제임스 앨런슨 애든버러대학교 강사, 국제정치 전공, 《히스토리컬 마티리얼리즘》지 편집위원.
2008~09년 요르던대학교 연구원을 지냈다.

2:00 ~ 3:50 **유럽 중심주의 비판**
오연 밀러 런던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학과와 버벡 대학 강사, 케임브리지대학교 연구교수.
조선 후기 사회·경제 역사를 전공했고, 한국 역사 기술 방법론을 연구한다.

4:10 ~ 6:00 **경제 성장이 지구를 죽이는가?**
개릿 데일 브루넬대학교 부교수(정치학·역사학), 기후정의운동가, 기후변화반대운동이라는 단체의 '1백만 기후 일지리 즉각 청출하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전 세계 지배 엘리트들의 분열을 드러낸 리비아 개입

서방 정부들의 리비아 개입은 세계 열강들의 관계가 얼마나 유동적인지 잘 보여 줬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리비아에 관한 투표가 진행됐을 때 〈파이낸셜 타임스〉의 네오콘 칼럼니스트인 크리스토퍼 칼드웰은 “세계 인구 가운데 30억 명을 대표하며 미래 세계경제의 중핵인 다섯 나라, 즉, 브라질, 중국, 독일, 인도와 러시아가 기권했다”고 지적했는데, 이것은 아주 약간만 과장된 것이었다.

독일 정부가 리비아 개입에 반대하면서 유럽연합은 또 한번 국제적 위기에 직면해 내부 분열로 마비됐다.

또 다른 〈파이낸셜 타임스〉칼럼니스트인 필립 스테판스는 이렇게 말했다. “독일 마샬 펀드가 주최한 연례 브뤼셀 포럼에 참가한 정치인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아랍 세계에 또 한 번 군사 개입을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지에 관해 독일 정부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유엔에서 러시아와 중국 정부와 한편에 선 것은 황당하다고 논평했다.”

한편, 프랑스와 영국은 지중해를 건너 진행 중인 서방 군사 공격을 주도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조심스런 구실을 하고 있다. 비록 미국 국방성이 대부분의 군사 임무를 떠맡고 있지만 말이다.

지난주 월요일 버락 오바마는 연설을 하면서 리비아 개입이 미국 정부의 세계 정책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려 했다.

이날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이것이었을 것이다. “우리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지 않지만, 우리의 이익과 가치가 위협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행동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행동의 부담을 미국 혼자서 져서는 안 됩니다.”

전 부시 정권과 연관된 네오콘들은 오바마 연설을 칭찬했다. 윌리엄 크리스톨은 이렇게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변명하지 않았고, 자유를 중요한 정책 의제로 수용했고, 군사력 사용 가능성과 미국식 가치와 이익을 주저없이 옹호했다.”

물론, “신속하고 단호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군사력을 사용할 권리”를 천명하면서도 오바마가 최대한 다른 나라와 함께 다자주의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크리스톨의 구미에 딱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리비아 개입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지금 미국 정부는 리비아 공중 폭격 작전에서 한 발 빼려 한다.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가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은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가 최근 한 발언과 일치한다. “차기 국방장관이 누가 되든 아시아나 중동 또는 아프리카에 또 한 번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하자고 대통령에게 조언한다면 그는 정신상태를 감정받아야 할 것이다.”

오바마는 미국 군사력을 아껴 쓰려 한다. 〈워싱턴 포스트〉보도를 보면,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 사령관인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와 한판 불을 작정이다. 오바마는 애당초 계획대로 올 7월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상당 수준의 철군”을 시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바마가 미국 제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정부 처지에서] 리비아 공습의 한 가지 이점은 미국이 아랍 혁명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오바마는 바레인의 혁명적 운동을 파괴하려 개입한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이나 다른 걸프 지역 지배자들과는 다르다.

역사가 이마누엘 월러스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을 리비아에 개입하도록 끌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리비아 개입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벌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즉 아랍 반란 탄압에 세간의 주위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아랍 반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자신과 다른 걸프 나라들, 더 나아가 전체 아랍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주의를 분산시키기를 바랐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리비아 개입을 주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그랬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주 런던에서 열린 리비아에 관한 국제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을 것이다.

호스니 무바라크가 무릎을 꿇은 날 오바마는 연설 중 아주 흥미로운 말을 했다.

“저는 또한 최근 이집트 청년들이 보여 준 독창성과 기업가 정신이 새로운 기회, 즉, 이 세대의 놀라운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을 도울 일자리와 사업 틀을 창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오바마는 아랍 혁명을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라 중동을 변화시킬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그는 좀더 ‘민주적’ 길을 따라 미국 제국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려 한다. 따라서 네오콘이 오바마를 칭찬한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킹스 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김용욱

리비아 항쟁을 좌초시키는 서방 개입

리비아에 대한 서방 군사 개입의 잔혹한 현실이 매일 밝혀지고 있다. 앞치락뒤치락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혁명은 점점 혁명가들의 손에서 탈취당하고 있다.

리비아에 발을 담은 몇몇 CIA 공작원과 서방 특수요원 등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카다피 진영 이탈자들은 이들 주변에서 리비아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자처하고 나섰다.

이것이 혼란을 자아내고 있다. 리비아 전 정 보국장 무사 쿠사를 포함해 옛 카다피 정권 인사들은 유럽으로 날아가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것은 때로는 협상으로 때로는 이탈로 묘사됐다.

리비아 혁명을 주도한 민중은 서방 열강에 이 용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또, 서방 정치인과 언론 들은 더는 리비아 반군을 용감한 자유 투사로 찬양하지 않는다. 그들은 리비아 반란군을 인종주의적 눈으로 바라본다.

이제 리비아 반군은 무규율하고 무식한 오합지졸로 그려진다.

서방 열강들은 아랍 민중을 열강들이 원하는 자리로 돌려 보내고 싶어 한다. 즉, 아랍 민중은 서방 군사력에 감사하는 수동적 무리거나 그것의 희생자라는 것이다.

지난주 서방 공군의 공격으로 반군 열 세 명과 의료진 네 명이 죽었다. 이들 중 누군가가 공중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을 보고 표적으로 오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군사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무기도 형편없음에도 용감하게 카다피 군대에 맞선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훈련받지 못한 것은 이들이 군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시와 마을 들을 카다피한테서 해방시키려고 목숨 걸고 싸운 이들이었다.

그러나 외부 세력의 개입 목표는 리비아 민중

의 목표와 전혀 다르다.

카타르는 리비아 석유 판매권을 가져 갔다. 카타르 정부는 석유 판매 대금을 넘겨주지 않고 현물로 지급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동부 리비아 반란군에게 연료, 식량, 의약품을 공급한다.

미국 정부는 또 다른 아프가니스탄식 수렁에 빠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정권교체를 바란다. 그러나 그 짐을 다른 열강이 떠안기를 바란다.

영국 공군 참모총장 스테픈 달튼은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동안” 서방 전투기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서방이 지원한 독재자들에게 맞서 싸워 온 수많은 중동 민중은 이런 비극적 광경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다.

주디스 오어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김용욱



4월 4일 리비아 벤가지의 반카다피 시위 서방 열강은 이런 대중의 에너지를 자국에 유리하게 악용하려 한다.

서방 개입에 반대하는 국제 진보 단체의 목소리

비아 캠페시나(국제 농민 단체 연합)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시작해 예멘과 시리아에까지 이르고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로 번진 대중의 항의 시위로 권위주의적 독재 정권들이 일제히 무너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 달이 넘는 동안 수십만 명의 리비아인들은 평화적인 거리 시위에 나서서 카다피의 퇴진을 요구했다.

카다피는 이러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는 커녕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했다. 리비아에서 벌어진 유혈과 죽음의 책임은 카다피에게 있다.

남반구초점(반신자유주의 NGO)

남반구초점은 무아마르 카다피의 43년 독재를 종식시키려는 리비아의 민주주의 저항세력을 지지한다. 남반구초점은 자유를 쟁취하려는 리비아 대중의 열망에 공감한다. 이들은 권력을 위해 자국 대중에게 엄청난 폭력을 주저 없이 행사하는 부패하고 억압적인 지도자에 대항한다.

그러나 남반구초점은 미국, 프랑스, 영국이 3월 20일 토요일에 자행한 대규모 군사 개입에 반대한다.

시민을 보호한다는 ‘비행금지구역’은 정권 전복을 목표로 하는 군사 공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후자야말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주도하는 개입의 속내다. 비록 유엔 안보리 결의안

현재 리비아 침공 작전에 참여한 나라는 프랑스, 미국, 캐나다, 영국이다. 이들은 몇 주 동안 리비아 대중에게 자행되는 학살을 지켜만 보면서 그 교착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할 만한 국제적 압력의 준비를 교묘하게 회피하다가 이제 와서 구세주 행세를 한다.

이미 리비아의 트리폴리와 그 외 지역의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폭격이 시작됐다. 서방의 폭격기들은 서방이 유엔 통치를 명분으로 리비아 점령을 추진하거나 훨씬 더 좋기로는 서방의 이해

에 가장 호의적인 카다피 반대파들을 찾아내고 이용할 수 있기까지 폭격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리비아에서의 군사 작전에는 주의를 돌리게 하는 효과도 있다. 예멘과 바레인을 비롯해 여전히 탄압이 지속되고기 때문이다.

비아 캠페시나는 중동의 민의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비아 캠페시나는 서방의 군사 개입의 즉각적인 종단을 촉구한다.

번역: 천형석

랍 국가들에게 미국의 전략적 가치를 떠올리게 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그러나 세계는 패권 국가의 위선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리비아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외치면서도 미국의 군사·정치적 후원을 받는 반동 정권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레인의 민주주의 세력을 침략하고 분쇄할 때 그 편에 섰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히 튀니지와 이집트의 민주주의 운동 세력이 리비아 대중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중동에서 미국 헤게모니를 유지하거나 재건하려는 모든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고 촉구한다.

번역: 천형석

리비아 혁명과 서방의 개입 Q&A

‘민간인 살상 방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주류 언론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서방 열강이 리비아 공습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났다.

서방이 리비아 혁명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혁명이 본래 방향을 잃고 왜곡되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서방 개입과 리비아 혁명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논점에 답하려 한다.

서방의 개입은 인명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했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은 지난 주 칼럼 ‘리비아 공습은 옳았다’에서 서방이 인명 살상을 막기 위해 개입한 것이라며 서방의 개입을 옹호했다.

사실, 리비아 민중 학살에 반대하는 정서는 너무나 자연스럽다. 많은 사람이 리비아 민중을 걱정하면서 서방 개입을 옹호한다.

또, 이대근은 이명박 정부를 줄기차게 비판해 왔고, 부시의 이라크 침략을 비판했다. 따라서 이대근은 다른 친서방 인사들과는 다르다.

그러나 만약 서방 열강들이 스스로 말하듯이 인명을 존중한다면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예멘 등 친미 동맹국 정부들이 민주화 시위대를 공격한 것도 저지해야 한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말로만 우려를 표했을 뿐이다.

지난주에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시위대 1백 명을 학살하고 수천 명을 다치게 한 예멘 대통령 살라게 물러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이대근은 “바레인·예멘에는 왜 개입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위험성, 긴급성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말한다.

이마누엘 월러스틴은 최근 글에서 이런 주장의 허약한 논리를 꼬집었다. “서방 개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개입 기준을 수량화하는 것 같다. 예컨대, 만약 어떤 정부가 10명을 죽인다면, 이것은 말로 비판하면 충분한 ‘정상적’ 상황이다. 만약 어떤 정부가 1만 명을 죽인다면 그것은 인도주의적 개입이 필요한 ‘범죄적’ 상황이다. 그럼 정확히 몇 명이 죽어야 ‘정상적’이 아니라 ‘범죄적’인가? 1백 명? 1천 명?”

이대근 같은 입장은 의도와 상관없이 자꾸만 서방 열강의 의도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면서 서방의 이중잣대, 자가당착 등을 변명하게 된다.

그래서 이대근은 또 다른 개입 지지 근거를 든다. 즉, “카다피 같은 위험한 인물이 있을 때”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튀니지 혁명은 서방 열강의 도움없이 민중 스스로 독재자를 몰아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다.

이것은 미국과 서방 정부가 코소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미래에는 북한?) 등을 공격할 때마다 내세운 논리를 고스란히 반복하는 것이다. 자신들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고 자신이 공격하려는 대상은 독재 악당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방 열강들의 리비아 개입을 지지한 아랍연합 국가들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독재 ‘악당’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현재 많은 서방 열강이 국내적으로 카다피 같은 독재 체제는 아니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유럽 정부의 내뿜 정책과 이에 대한 대중적 반발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도 수백만, 수천만 명을 고통에 빠뜨리고 다수 인구가 반대하는 정책을 폭력을 사용해 밀어붙일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이 언제 중동 지역에서 카다피와 견줘 선행을 베풀 적이 있겠는가? 오히려, 이들이 이라크를 10년간 경제 제재하고, 침략하고 점령하지 않았다면 많은 아동을 포함해 수백만 명이 죽지 않았을 것이고 수천만 명이 도탄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유네스코 보고를 봐도 1990년대 이라크 경제 재제로 의약품이 부족해 이라크 아동 50만 명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죽었다. 저명한 의학저널 〈랜셋〉은 2006년 10월 발표한 글에서 2003년 시작된 이라크 전쟁과 점령의 결과로 이라크인 약 1백만 명이 죽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이것은 서방의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친미 경비군 이스라엘이 저지른 살상행위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다.

카다피는 악당이었지만 이런 서방 악당들의 가공할 파괴력에 덜 만한 짓은 저지할 수 없었다.

그럼, (좁스키가 지적하듯이) 카다피를 능가하는 서방 악당들의 악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워싱턴과 파리 등을 폭격해야 할까? 많은 미국 민간인이 죽은 9·11을 기억해 보자. 그것은 부시 정부를 강화시켰고 그가 미쳐 날뛰면서 전쟁과 학살에 나서는 빌미가 됐다. 리비아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서방의 폭격이 리비아 혁명을 살렸다?

개입을 지지하는 또 다른 가장 흔한 주장 하나는 서방 열강의 군사 개입 덕분에 죽어가던 혁명이 살아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우선, 서방 언론들이 인정하듯이 서방의 폭격은 지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폭격이 시작된 뒤 지난 몇 주 동안 지상 상황은 앞치락뒤치락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브레다 등에서 반란군이 선전한 것은 어디까지나 혁명 지지자들이 여전히 군사적으로 우월한 카다피군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운 결과다.

또, 서방 정부와 주류 언론처럼 리비아 혁명을 군사적 관점에서만 보면 왜 이 혁명이 초기에 그토록 강력했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2월 17일 동부 지역에서 시작된 시위가 불과 일주일 만에 카다피를 궁지로 몰아넣고 그의 군사력을 마비시킨 것은 혁명 세력이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민중의 압력 때문에 군이 분열했기 때문이었다.

혁명은 외부 군사 개입이 없었던 2월 말에 최절정에 도달했다. 당시 카다피는



3월 26일 다국적군의 리비아 폭격 규탄 집회

리비아 전 국토의 80퍼센트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 이후 혁명 세력은 카다피의 반격에 직면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카다피가 남은 군사력을 정비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이 이질적 세력을 포함 — 특히 카다피 세력에서 이탈한 엘리트들 — 한 덕분에 일직선으로 급진화하고 힘을 집중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일부 귀족 세력이 혁명에 가담해 입헌군주정에서 혁명을 마무리하려 했던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 모든 혁명이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그러나 현 리비아 혁명가들은 18세기 프랑스 혁명가들은 겪지 못한 상황을 겪고 있다. 오늘날 서방 열강들은 멈출 수 없는 기관차를 강제로 멈추려 하기보다는 그것의 방향을 바꾸려는 교활한 술책을 펴고 있다. 서방의 개입으로 리비아 혁명은 급진화하는커녕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리비아 혁명은 카다피 독재 권력과 부의 독점 — 리비아 국내총생산의 거의 절반인 3백억 달러에 이르는 카다피 일족의 해외 계좌로 상징되는 — 에 반대하는 혁명이다.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고 혁명에 참가하겠는가?

그러나 서방 정부들은 리비아 부의 핵심인 석유 자원을 놓고 카다피 정부가 서방 기업과 맺은 계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서방 정부는 리비아가 ‘테러와의 전쟁’을 지속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과도국가위원회에서 혁명 지지 세력의 중요한 한 축인 이슬람주의 세력(서방 정부가 특하면 ‘알카에다’로 뭉뚱그려 표현하는)을 축출하라는 압력으로 점차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내부 숙청 요구와 뭐가 다른가.

동시에, 서방 군사 개입은 카다피가 무너진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즉, 서방 정부·기업과 거래해 막대한 부를 챙긴 카다피가 자신을 반서방 제국주의 투사로 내세울 명분을 주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서방 폭격으로 민간인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강화될 것이다.

최근 트리폴리의 대목구장인 지오반니 이노첸초 마르티넬리는 로마 교황청 통신사인 〈피데스〉에 “트리폴리의 무슬림 지역에서 민간인 소유 빌딩이 폭격으로 붕괴, 4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데, 과거 코소보 전쟁 등에서 서방 폭격이 낳은 결과를 볼 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리비아 혁명에 대한 서방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혁명은 본래의 목표를 잃고 왜곡될 것이고, 리비아 민중이 목숨걸고 싸울 이유도 약해질 것이다. 이것은 최악의 경우 친서방 정부의 수립이나 반혁명 세력의 반격을 가져올 확률을 높일 것이다.

리비아 혁명은 서방의 음모였다?

리비아 혁명의 운명을 걱정하며 서방 개입을 옹호하는 주장의 반대편에서 일부 국내의 좌파들 — 한호석, 〈글로벌 리서치〉운영자 미셸 초스도프스키 등 — 은 리비아 혁명이 친서방 음모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카다피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이번 ‘혁명’이 소수 반카다피 엘리트와 서방 열강들이 손잡고 준비한 ‘색깔 혁명’이지 기층 혁명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반란군의 성분이 의심스럽다고 말하며 사실상 리비아 혁명을 지지하지 않는다.

〈민중의 소리〉도 “리비아 사태는 민주

화 운동과 거리가 멀다”며 “기득권 파벌 간 내전”이라고 깎아내린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한국진보연대도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상당수 혁명 세력들이 제한적 수준의 서방 공습을 옹호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거봐 내가 뭐랬어’ 하는 식의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리비아 혁명 세력들은 처음에 서방 군사 개입에 반대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지금도 서방의 지상군 투입을 반대하는 정서가 상당히 존재한다.

서방음모설은 서방 정부가 카다피를 제거할 음모를 꾸밀 설득력 있는 이유를 딱히 제시하지 못한다.

그들은 보통 서방과 타협하기 이전의 카다피 전적을 들먹인다. 그러나 유럽과는 1990년대 말부터 미국과는 2004년부터 정신없이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다국적 석유 기업을 환영하고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과 유럽의 반이주인 정책에 적극 협력한 카다피를 서방이 왜 제거하려 하겠는가.

리비아 혁명에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제국주의 열강 패권의 핵심 지역 중 하나인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제국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투쟁에 기권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는다.

문제는 카다피가 반격에 나서고 혁명 확산이 정체된 틈을 타서 카다피 정부 이 탈자들이 서방과 혁명 세력의 중재자 구실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이 서방 열강과 손을 잡고 혁명을 가로챌 위험성은 분명 존재한다. 역사상 혁명은 성공도 했지만 실패도 했다. 중요한 것은 리비아 혁명이 아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카다피의 학살을 지켜보기만 하라는 것인가?

서방의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것이 곧 리비아 혁명을 지지하지 않거나 심지어 카다피의 독재를 지지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함께, 사회진보연대처럼 카다피에 맞서 리비아 혁명을 지지하면서도 서방의 개입을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이 있다.

리비아 혁명의 성공은 리비아 민중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점은 분명한 진실이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방 열강이 리비아 민중을 대신해 카다피를 제거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열강이 혁명을 대신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서방 열강의 리비아 통제를 뚫을 것이다.

리비아 내 서방 열강의 기존 이권이 완벽하게 보존될 뿐 아니라 훨씬 확장될 것이고, 서방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은 탄압받을 것이다. 중동 전문 기자 패트릭 콕번의 말처럼 “가장 영어를 잘하는 리비아 엘리트가 낙하산을 타고 정부로 내려오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즉, 더는 혁명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결정된 결론이 아니다. 지금 전 세계 민중은 리비아 혁명의 성공을 바라며 연대할 수 있다. 그것은 우선 서방 열강이 리비아 혁명을 파괴하는 것에 항의하는 행동이 돼야 한다.

혁명이 심화하고 있는, 인접한 이집트와 튀니지의 혁명 세력은 좀더 직접적인 연대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고, 리비아 민중이 서방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독재자를 몰아낼 수 있다는 정치적 자신감을 줄 수 있다.

김용욱

아랍 혁명과 국제 좌파의 과제

다음은 최근에 있었던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주요 단체 대변자들 사이의 대담 중 아랍 혁명에 관한 부분만 정리한 것이다. 한국 관련한 최일봉(다함께 국제연락21)의 말은 생략했다. 녹취와 번역에는 전문 통역자이자 다함께 회원인 천경록이 수고해 줬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WP
아랍 혁명들은 분명 세계사적 중요성을 갖는 과정이다. 첫째, 튀니지와 이집트의 혁명은 연속 혁명으로 발전할 실질적 잠재력이 있는 미완의 과정들이다.

독재 정권들이 타도된 뒤 이어지고 있는 구 정권 청산 작업, 보안 경찰을 해체하려는 움직임, 새 헌법을 둘러싼 투쟁, 무바라크 퇴진 이전부터 폭발하기 시작한 노동자 운동 등을 보면 이 과정이 연속 혁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집트의 경우 이 과정에서 우리 자매 조직인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하 RS)’이 중요한 구실을 했음을 빠뜨릴 수 없다. 예컨대 RS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보안 경찰에 대한 공격을 처음 시작했고 이것이 일파만파 확대됐다.

둘째, 아랍 혁명은 아직 중동 전역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완의 과정이다. 지난 열흘 사이 시리아에서 일어난 사태가 이를 특히 잘 보여 준다.

시리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정권은 가장 타도하기 어려운 축에 드는데, 왜냐하면 둘 다 매우 협소한 혈연 기반의 독재 정권들이고, 종파간 분열이 존재하고, 매우 억압적인 통치 기구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사우디는 아직까지는 시위 확산을 막는 데 성공하고 있는 듯하지만 시리아에서는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아랍 혁명은 개별 국가 수준에서든 지역 수준에서든 미완의 과정이다. 우리에게는 이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중동에서 가장 거대하고 투쟁 경험이 많은 노동계급이 존재하는 이집트의 RS가 바로 그것이다.

RS 동지들은 이집트 혁명으로 가는 길을 닦은 이전의 모든 운동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즉, 하나의 경향으로서 IST는 이 과정에 직접적인 정치적 개입을 해 온 것이다.

우리는 세계 혁명의 가능성을 논할 때 항상 이집트를 중요한 고리로 생각해 왔고 한동안 RS를 지원하는 데 많은 역량을 쏟아 왔다. 그러므로 향후 이집트 혁명의 전개 과정은 우리 정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아랍 혁명에서 또 다른 변수는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개입이다. 서방의 개입은 여러 모로 뜻뜻미지근한데, 특히 미국이 주저하는 기색은 2000년대 초의 기세등등함과 확연히 대비된다. 서로 모순되는 동기도 있는 듯하다.

프랑스의 의도는 지중해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재천명하는 데 있는 반면 미국은 사태 흐름을 앞질러 감으로써, 즉 시위대와 같은 편인 척함으로써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 그렇게 얻은 통제력을 결국에는 중동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한다는 목적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서방의 리비아 개입은 반제국주의 좌파를 분열시키는 효과를 어느 정도 냈다. 예컨대 질베르 아슈카르(프랑스 사회주의자)는 지난주 오바마의 연설을 거의 찬양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여론을 보면 예컨대 영국 여론은 이라크 전쟁 초기보다 리비아 개입에 덜 우호적이다. 오바마 역시 자신의 지지도 하락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리비아 개입은 아랍 혁명의 결과를 제국주의에 더 안전한 방향으로 끌

고 가려는 서방 국가들의 시도로서, 아랍 혁명 과정을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고 있다. 어쨌든 우리는 리비아 사태를 중동 지역 전체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SEK
아랍 혁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유념할 점이 있다. 첫째는 긴축에 반대하는 투쟁에 참여해 온 그리스인들에게 특히 아랍 혁명이 큰 자극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혁명이 다시 의제에 올랐다는 생각은 운동 진영과 혁명적 사회주의자들 모두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 아테네를 타호리르 광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불어넣어 줬다. 물론 이것이 성급한 행동을 낳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랍 혁명이 그리스의 모든 시위와 파업에 자신감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가 과거 [중동에 대한] 개입을 반대할 때는 항상 개입의 동기가 석유 통제권만이 아닌 강대국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미국의 패권 유지와 관련 있음을 지적해 왔다.

이는 리비아 개입과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알렉스가 질베르 아슈카르의 사례를 언급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리비아 개입은 좌파 진영 내에서도 혼란을 자아내고 있다.

[그리스의] 스탈린주의 좌파들, 특히 공산당은 리비아 사태가 음모이고 진정한 혁명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서방의 개입을 불러들이기 위한 명분 만들기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좌파 진영 내의 이 같은 주장들을 반박해야 한다. 제국주의 전쟁의 전개 과정에 관해 우리 전통이 제시하는 풍부한 설명을 활용하고 리비아 개입이 어떻게 그 과정의 일부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풍부하고 열띤 논쟁에 개입해야 한다.

캘리니코스 서방 개입을 반대하면서도 리비아 혁명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바로 리비아 혁명을 지지하기 때문에 서방 개입에 비교적 동조적인(그리고 카다피를 옹호하는) 많은 아랍 대중과 접점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우리의 주장이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주장이 호소력을 얻을 것이다. 이미 리비아 반군 쪽에 대한 서방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CIA 등과 같은 어둠의 세력이 리비아에서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들은 갈수록 반군들을 서방의 공습 작전을 위한 척후병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땡가지의 임시정부 ‘리비아 국가위원회’도 갈수록 친서방적인 이미지를 내세워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현실의 상황 전개가 우리의 주장을 입증해 줄 것이다.

불행히도 그것은 리비아 혁명이 약화됨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설명 그렇게 된다 해도 중동 전역의 혁명 물결이 끝난 것은 아님을 우리는 강조해야 할 것이다.

슈테판 보르노스트 독일 마르크스21
독일에서는 논쟁 구도가 평상시와는 정반대다. 알다시피 독일은 UN에서 리비아 개입에 반대표를 던졌다. 독일 우파들은 카다피를 싫어할 이유가 없다. 지금껏 카다피는 그들의 훌륭한 사업 파트너였고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의 유럽 유입을 막아 주는 방파제였다.



4월 1일 카이로 타호리르 광장에 모인 시위대 이집트 혁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독재 정부의 하수인 국가안보국을 점거한 시위대

오히려 녹색당과 사민당 좌파들이 리비아 개입을 가장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핵 발전 문제 등 다른 여러 쟁점과 관련해서는 우리와 종종 협력해 온 세력들이 말이다. 이런 사람들을 ‘배신자’라거나 ‘적들의 편으로 넘어갔다’는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보다는 ‘무엇이 혁명에 도움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리비아 개입에 반대하는 쪽에는 애당초 리비아 혁명에 무관심했거나 반군들을 ‘지하드[성전]주의자들’ 정도로 취급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사회주의자’ 카다피를 방어하기 위해 서방 개입에 반대하는 것이다.

반대로 처음부터 아랍 혁명에 관한 우리의 주장에 동의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서방 개입에 동조적이다. 이런 사람들을 내치기보다는 그들과 동지적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디링케는 처음부터 리비아 개입에 분명히 반대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독일 정부도 처음부터 리비아 개입에 반대했고, 독일 여론도 카다피 군을 폭격하는 것을 지지하는 여론은 2퍼센트, 독일 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은 62퍼센트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올바른 입장인 건 하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그 논거에 종종 문제가 있다. 상당수 사람들이 카다피를 지지하는 관점에서 개입을 반대한 것이다.

캘리니코스 그런 류의 스탈린주의 정치와 선을 긋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리비아 반군 진영의 구성은 매우 이질적인 것 같다. 카다피 정권에서 떨어져 나온 인사들도 있고, 자유주의적 인권 지지자들도 있고, 이슬람주의자들도 일부 있는 듯하다.

일각에서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알 카에다일 것으로 단정하는데, 그렇게 볼 근거는 전혀 없다. 우리 쪽에서 리비아 사태를 가장 밀착 취재하고 있는 동지가 얼마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리비아의 이슬람주의자들과 한 인터뷰를 올렸다. 거기서 이슬람주의자들은 서방의 리비아 개입 때문에 서방에 대한 자신들의 시각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집트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활약

캘리니코스 지금 RS는 여러 가지 일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독립 노조를 건설하는 일에 몇 년째 힘을 보태고 있다. 둘째, 혁명수호민중 위원회들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의 상당수 지역에서 민중위원회 건설을 주도한 바 있다.

민중위원회를 통해 RS 동지들은 조직 규모를 크게 뛰어넘는 영향력을 발휘해 왔고, 앞서 언급했듯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보안 경찰에 대한 공격을 이끌기도 했다.

셋째, 민주노동자당(Democratic Workers’ Party)을 만들려 하고 있다. RS보다 더 광범한 당으로 만들 계획이고, 지난 수년간의 노동자 투쟁 속에서 새롭게 떠오른 노동자 활동가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 프로젝트는 민중연합당(Popular Alliance Party)이라는 것을 만들려는 또 다른 프로젝트와 경합을 벌이고 있다. 민중연합당은 사실상 기성 좌파들의 재결집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집트 공산당의 합법 프론트 조직이었던 타가무 당이 참여하고 있다. 타가무 당 지도자들은 무바라크를 사실상 지지한 전력 때문에 매우 큰 불신을 받고 있다.

한편 군부는 명백히도 최소한의 헌법 개정만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구 집권당인 NDP(국민개발당)뿐 아니라 무슬림형제단도 최소한도의 개헌이라는 목표에 힘을 보태고 있다.

2주 전쯤에 군부가 제시한 최소한도의 개헌안을 놓고 국민투표가 실시됐는데, 이를 주도한 양대 세력도 NDP와 무슬림형제단이었다. 국민투표 결과를 보자면 찬성이 78퍼센트, 반대가 22퍼센트 정도였던 듯하다. 그다지 나쁜 결과는 아니라고 본다.

카이로에서는 찬성이 60퍼센트, 반대가 40퍼센트였는데, 이는 당시 카이로 상황을 고려하면 결코 나쁜 결과가 아니다. 당시 반대를 주장하는 세력은 인권운동가들과 강경 좌파들 정도였다.

규모 있는 정치 단체들은 찬성표를 던지자고 주장했다. 전국 수준에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은 혁명의 기운이 아직 농촌까지는 충분히 전파되지 못했음을 반영한다. 이집트에서 여전히 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 사이에서는 무슬림형제단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듯 이집트에서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무슬림형제단은 동질적인 조직이 아니다. 일종의 고전적 사회민주당이라고도 볼 수 있다.

비록 본질은 부르주아 정당이지만 구 정권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 저항이 너무 멀리 나아가지 않도록 억누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무슬림형제단의 부르주아적 지도부는 명백히도 군부와, 그리고 이집트 지배계급과 모종의 거래를 맺은 것 같다. 그들의 목적은 무슬림형제단 내 ‘근대화주의자’들의 이상인 터키식 정치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즉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회적으로 보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이슬람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의 청년 조직들은 혁명에 적극 참여했다. 이 청년 조직들과 지도부 사이에는 온갖 종류의 분열이 존재한다.

RS 동지들은 이처럼 매우 복잡한 환경 속에서 활동해야 한다. 그래서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이들은 소규모 조직으로서 진정한 혁명적 과정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고, 그래서 할 일이 태산처럼 많다.

이집트 혁명을 심화시키기

이집트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의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기구들을 결성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앤 알렉산더가 혁명수호민중위원회 활동가 사에드 압달라흐만을 만나 인터뷰했다.

저는 마아디, 바사틴과 다르알살람 지역 혁명수호민중위원회[이하 민중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회는 무바라크가 쫓겨나고 며칠 뒤, 일단의 활동가들 - 대부분 좌파입니다 - 이 설립했습니다.

활동가들은 혁명 이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문제, 이라크 전쟁, 이 지역 문제를 놓고 함께 일해 왔습니다.

혁명이 시작된 뒤부터 우리의 주된 고민은 '이 혁명을 어떻게 전진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많은 사람은 혁명이 단지 무바라크 제거만을 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이 그보다 더 근본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혁명을 지속할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무바라크 몰락 이틀 뒤 혁명 열사들을 기리는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민중 위원회로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음향시스템, 마이크, 작은 탁자 등을 준비했고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주민 2백 명이 왔습니다. 거리에 서서 정치에 관해 토론하는 것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무바라크 정부 아래 우리는 때때로 대략 30분 동안 짧은 시위를 열었습니다. 짧게 해서 경찰이 시위를 공격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두세 시간 동안 큰 거리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마치 민중의회 같습니다.



사진 제공: Hassan el-Hamrawy

2월 가스 노동자 파업. 민주노동자당은 이런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모든 이가 혁명에 관한 자기 생각과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여 회원들의 면면을 보면, 회원 구성이 그 지역의 사회적 성격을 반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르알살람 주민들 다수는 소생산자이거나 장인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조직하기 아주 힘든 집단이죠. 그들은 보통 작은 작업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사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국가 경제가 멈춘 때에 반혁명 세력이 이들을 자기 편으로 획득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정치 활동을 벌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에 만나 다음 한

주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토론합니다. 우리는 다수결이나 때로는 합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무슬림과 기독교도 간의 단결을 과시하는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또, 경찰이 미니버스 운전사를 살해한 것에 항의하는 행동을 벌여 1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 단체의 회원이라 하더라도 민중위원회에서는 개인 자격으로 활동합니다. 창립 회원들은 좌파 출신이 많은데, 일부는 혁명적 사회주의자이고, 일부는 1970년대 세대의 좌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생각에 동의하고 활동하길 바란다면 함께하자고 말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슬림이든, 가톨릭 교도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젊은 늙은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혁명을 지속한다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민주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장하는 정치 기구들을 건설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정치 기구들의 실제 사례로는 러시아혁명의 소비에트, 20세기 다양한 혁명들에서 나타난 주민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이것이 미래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멘 정부군의 학살에 물러서지 않고 저항을 지속하다

예멘 대통령 알리 압둘라 살레에 맞선 저항이 예멘을 뒤흔들고 있다. 살레의 보안군은 저항 운동을 진압하려 한다.

이번 월요일(4월 4일)에 예멘 수도 남부에 있는 타이즈 시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한 정부 건물을 점수하려 했다. 경찰이 발포했고 12명이 죽고 30명이 다쳤다.

그 전날에는 정부군이 시위대를 공격해 수백 명이 다쳤다. 한 목격자는 타이즈 시 사건을 “학살이었다” 하고 전했다.

이번 월요일에 후다이다에서는 수백 명이 대통령궁으로 행진했다. 경찰은 발포했고 50명이 다쳤다.

지난 일요일에 예멘 남부인 아덴에서는 시민불복종 운동이 발생해 거리가 텅 비었다.

시위 참가자 수천 명은 사나 대학교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핵심 정부와 군의 인사들이 대거 사임하면서 살레는 더 큰 압력을 받게 됐다. 3월 18일 시위대 52명이 죽은 후 많은 이가 사임했다. 정부 저격수들이 이날의 시위대 학살에 책임이 있다.

시위대의 압력 때문에 살레는 자신이 2013년에 사임할 것이고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운동은 이 발표에 만족하지 않으며 즉각 사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요일에 살레는 저항 세력이 “점거·도로 봉쇄·암살을 중단하고, 일부 군부대가 반란에 가담하길 중단해야” 개혁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살레의 사임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저항이 확산돼 이 지역에서 자신의 입지가 더 약해질까 봐 걱정한다. 그래서 예멘 정부에 ‘점진적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정부는 살레 정부를 ‘테러와의 전쟁’의 중요한 동맹으로 여겨 왔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번역: 김용욱

“우리는 정당이란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릅니다”

이집트 민주노동자당 창당 모임에서 사회주의자 카말 칼릴의 연설

노동자들에게는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파업, 독립 노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표현하고 노동자 권력을 조직하기 위한 정당이 필요합니다.

현 정권의 온갖 파업 금지법안과 노동자들을 어용 노조에 묶어 두려는 책략에 상관없이 이집트 노동자들은 파업이란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노동자들은 2006년부터 파업 금지 법안을 거슬러 파업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또, 세무공무원들과 마할라 방직 노동자들은 독립 노조 건설을 범죄화하는 법들에 연연하지 않고 독립 노조를 건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정당이란 무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정책이나 민주적 요구

에서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정당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정당도 계급이나 제국주의 문제에서 노동자의 관점을 표현하려 하지 않았습니

다. 이제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는 당 강령을 논의해 왔습니다. 우리는 신문을 발행할 것이고 창당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원을 모집하고 있고, 강령을 토론할 창당 대회를 열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강령에서 어떤 부분을 삭제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동자당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지식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에즈에서 노동자 1천 명, 마할라에서 노동자 1천 명, 철도에서 노동자 1천 명 등 주로 노동자들

로 구성된 정당을 건설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령에 동의한다면 지식인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70~80퍼센트는 노동자들로 구성돼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자기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당

따라서 창당 대회에는 세무 공무원, 마할라 노동자, 대중교통 노동자, 수에즈 운하 노동자, 포트 사이드 공단 노동자들이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노동자 집단은 창당 대회에 선출한 대표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노동자당은 노동자의 정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민의 요구도 강령에 반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2011년 3월 23일 현 이집트 내각이 시위와 파업권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런 행동을 ‘선동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엄청난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각국 정부들이 파업과 시위를 탄압하는 데 사용하는 각종 장비와 무기들을 이집트군과 보안군에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집트 독립 노조의 용감한 형제자매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내며, 그들의 권리가 공격받는 것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우리는 정치적 자유와 사회정의의 바라는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모든 활동을 벌일 것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노동자 연대 네트워크에서 보내 온 성명서

이집트 정부의 시위와 파업 금지 시도에 항의한다!

이집트 민중은 무바라크를 내쫓는 투쟁을 벌이면서 놀라운 용기를 보여줬다. 그들은 감장차가 돌진하고, 총탄 세례가 쏟아져도 굴복하지 않고 싸워 자

유와 정의의 연으려 했다.

우리는 이집트의 현 군부와 민간 통치자들이 이런 이집트 민중의 뜻을 받들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할 것을 촉구한다.

파리 코뮌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었다. 자본의 신 세계가 지구 전체를 삼키며 질주하려던 그 순간에 파리 노동계급이 비상 브레이크를 힘껏 잡아 당겼다. 파리 코뮌은 “세계 역사상 최초로 벌어진 노동계급의 사회주의 혁명 예행연습”(레닌)이었다.

계기는 두 국가 사이의 전쟁이었다. 더 근원적으로는 점증하는 프랑스 대중의 불만이 있었다. 지배 계급은 분열했고 나폴레옹 3세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을 탈출구로 삼았다. 그러나 전쟁 두 달여 만에 그 자신이 포로가 됐다.

그 이후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 군에 맞서 실질적으로 도시를 방어한 것은 국민방위군으로 조직된 무장한 노동계급이었다. 그들은 기아 상태에서 추위를 견디며 초인적으로 다섯 달을 버텼다. 무책임한 지배자들 때문에 대중의 가슴속에는 분노가 차 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공화파는 좌파들을 진압하고 왕정주의자들을 복권시켰고 급기야 반동적인 아돌프 티에르가 정부 수장이 됐다.

티에르는 국민방위군 수중에 있는 몽마르트 언덕의 대포들이 두려웠다. 적개심에 가득찬 대중이 언제 그것을 자신에게 겨누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티에르는 정규군을 보내 새벽에 조심스럽게 대포들을 옮기려 했지만 루이즈 미셸이라는 여성 노동자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미셸은 소총으로 무장한 여성 노동자 2백여 명을 이끌고 와 정부군 3천여 명과 맞섰다. 장군은 세 차례나 발포 명령을 내렸지만 모든 병사들이 이를 거부했다. 장군은 체포됐다.

그날 오후 세 시에 티에르는 모든 정부기구를 이끌고 파리 남쪽의 베르사유로 도망쳤다. 파리는 진공상태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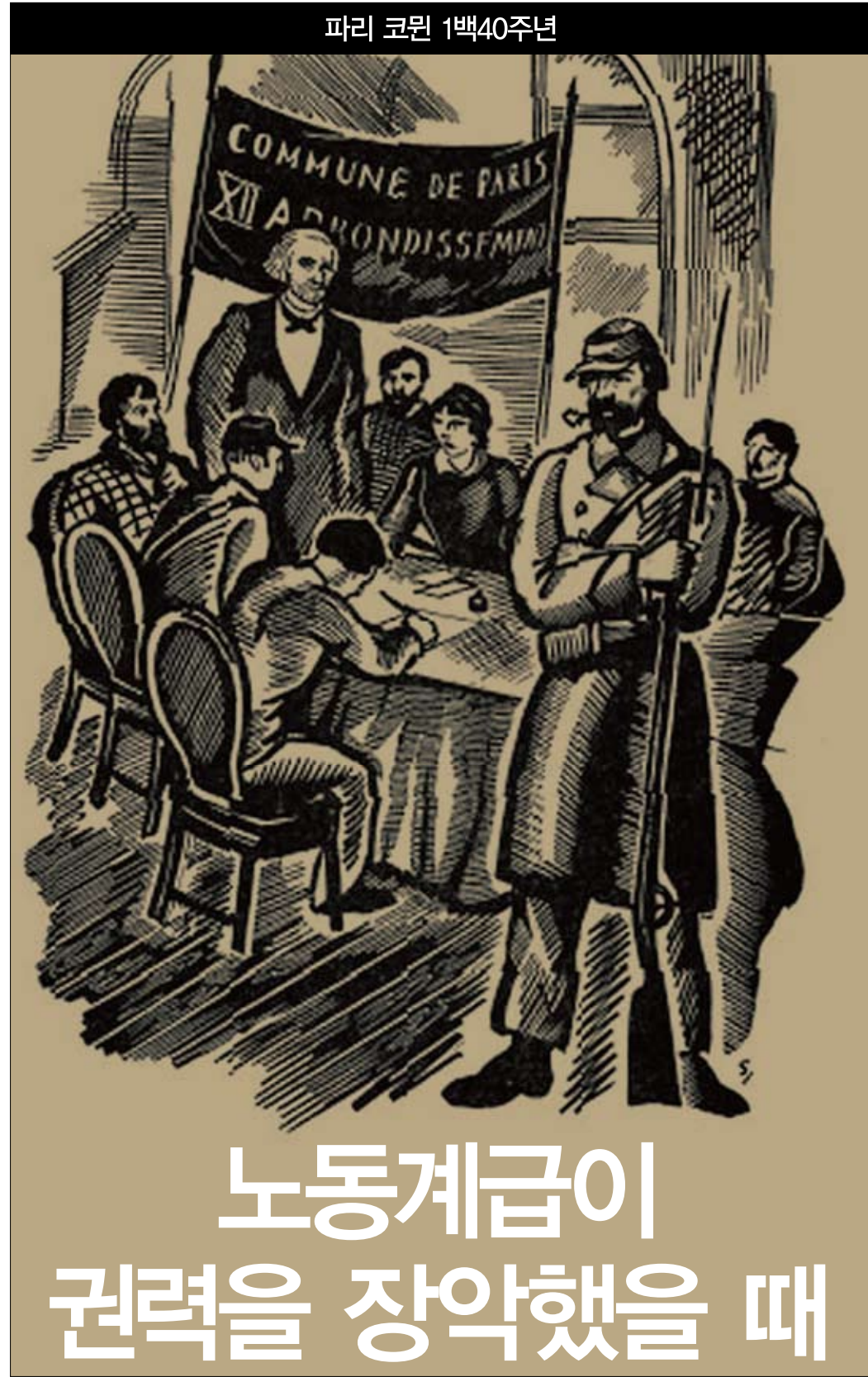
즉각 노동계급의 권력이 그 공백을 메웠다. 파리에서 날마다 축제가 벌어졌고 대중의 약동하는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다. 국민방위군 중앙위원회는 남성 보통선거권을 기초로 한 선거를 실시해 각 지역별 대의기구인 코뮌을 구성했다.

그것은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였다. 코뮌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구성됐다. 첫째, 모든 공직자는 선출돼야 하고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다. 둘째, 선출된 사람들의 월급은 노동자 평균 임금을 넘어선 안 된다. 셋째, 선출된 사람들은 부르주아 의원단들처럼 수다만 떨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집행하고 책임져야 한다.

코뮌은 국가 아닌 국가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중이 국가에 소속돼 있었으나 오늘 창출된 새로운 종류의 국가는 대중의 통제에 복속되어야만 했다. 놀랍게도 단 며칠 만에 코뮌은 노동대중 자신들을 위한 일을 하는 실질적 기구로 발전하고 있었다.

코뮌은 당장 국가 권력의 핵심에 도달했다. 기존의 무장한 국가기구를 해체하는 것이 그들의 첫 임무였다. 징병제와 상비군, 경찰은 폐지됐고 무장한 노동계급이 이를 대체했다.

그 이후로 두 달 만에 코뮌이 이뤄 낸 것의 상당



수는 1백4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도 성취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코뮌은 야간 노동을 폐지했으며, 임대료를 체불한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게 했다. 공장주들이 버리고 간 공장은 노동자들이 운영했다. 남편을 여린 여성에게는 연금이 지급됐다. 아동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됐으며 교육과정에서 종교적 강요를 걷어냈다. 더는 단두대와 나폴레옹 동상 같은 독

재와 군국주의의 상징물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그 가운데 백미는 전쟁 중인 독일 노동계급에 대한 연대의 표시로 독일 노동자를 노동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유지 하는 데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다. 바로 베르사유였다. 티에르가 베르사유로 도망간 날만 해도 군사력은 파리의 국민방위

군이 우세했다. 하지만 그 후 보름 동안 역전이 일어났다.

티에르가 세력을 키우기 전에 완전히 제압했어야 했다. 그럴 가능성은 있었다. 티에르는 대부분의 병력을 잃은 채 도망갔다. 게다가 실제로 티에르가 도망간 직후에 국민방위군 중앙위원 일부는 코뮌 선출 전에 “우선 베르사유를 쓸어버린 뒤 프랑스 전역에서 봉기를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배계급에게 아량을 베풀거나 시간을 벌어주는 일은 얼마나 위험한가.

코뮌은 티에르의 물질적 자원을 장악하는 데도 무심경했다. 티에르가 프랑스 은행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빌려가기 전에 완전히 몰수했어야 했다.

훗날 러시아 노동계급은 파리 코뮌에서 배워야 했다. 트로츠키는 그의 저서 《러시아 혁명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수병들은 ‘신속히 움직이며’ 건물을 점령했다. 국영은행의 점령은 어느 정도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 볼셰비키당 중핵들은 1871년 파리 코뮌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비판을 통해 정치적으로 성장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코뮌의 지도자들은 국영은행에 손을 댈 엄두도 내지 못했다.”

몰수

지배계급에게는 머뭇거림이 없었다. 티에르는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꾸준히 병력을 모았다. 파리 노동계급의 급진성에 감염됐을 법한 파리 정규군은 제외했고, 농촌에서 6만 명을, 비스마르크에게서 포로 40만 명을 확보한 뒤 파리 외곽의 요새들부터 차례대로 격파해 들어왔다.

파리 코뮌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졌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파리 노동계급에게는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나날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들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지는 자신의 희생이 또 다른 코뮌의 창출로 이어지기를 바랐을 것이다. 마지막 교전지인 페르라세즈 공동묘지에서 노동자들은 비석들을 엄폐물 삼아 후퇴하다 막다른 벽 앞에서 사살됐다.

그 뒤 일어난 일들은 지배자들의 아만성과 복수심을 보여 줬다. 노동자들은 가축처럼 도살됐다. 거리는 바리케이드 잔해더미와 시체 3만 구로 뒤덮였다.

코뮌이 이리저리한 미숙함은 있었지만 “코뮌의 가장 큰 업적은 코뮌이 존속했다는 것 자체였다.” “그것이 자라나는 토양은 근대 사회 자체다. 아무리 살육을 한다 해도 그것을 짓밟아 없앨 수는 없다. 이를 짓밟아 없애고자 한다면, 정부들은 자기 자신의 기생적 존속조건인, 노동에 대한 자본의 전제를 짓밟아 없애야 할 것이다.”(마르크스)

21세기 노동계급은 파리 코뮌 전사들이 남긴 유언의 집행관이 돼야 한다.

한수영

영국

50만 명이 긴축에 반대해 행진하다

1980년대부터 영국은 마거릿 대처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개악을 대변하는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난 3월 26일 영국 런던에서 50만 명이 보수당과 자민당 연정의 신자유주의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행진을 벌였다.

이것은 영국 역사상 가장 큰 시위 중 하나였다.

거의 모든 노조 지부들이 참가했고, 긴축 반대 활동가, 연금 수령자, 학생과 실업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행진했다.

지난해 말 영국 학생들의 전투적 투쟁이 대중의 자신감을 높인 것이 이날 시위에 다양한 집단이 참가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날 시위는 대규모 노동계급 시위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분노해 있었고 싸우려는 의지로 충만했다. 지금 영국 노동자 수 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한다. 또, 더 많은 사람은 보수당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려 한다고 믿고 있다.

실제로, 연립 정부의 긴축정책 내용을 보면, 2015년까지 공공부문에서만 일자리 30만 개가 사라지고 그 영향으로 민간 부문



3월 26일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 이날 집회는 영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였다.

에서도 일자리가 70만 개나 사라질 것이다. 연립 정부는 2008년 경제 위기 당시 정부가 부자 은행들을 지원하면서 생겨난 공공부채를 공공서비스와 일자리를 줄여 갚겠다는 계획이다.

자민당의 도움을 받아 긴축을 추진 중인 보수당은 자신의 정책이 초래할 고통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다. 현 정부 내각 구성원 다수가 백만장자이기 때문이다.

시위대는 이런 정부에 단 한 톨의 공공 예산 삭감도, 단 하나의 일자리 파괴도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이 백만 옳다. 왜 부자들이 초래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와 빈민이 치러야 한단 말인가?

최근 영국 경제학자 그레그 필로는 〈가디언〉칼럼에서 중요한 점을 폭로했다. 그는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10퍼센트의 재산이 4조 파운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재산에 단 한 번만 20퍼센트의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8천억 파운드를 모을 수 있고, 그러면 공공부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당의 에드 밀리반드 지도부는 긴축이 일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긴축의 속도만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필로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긴축은 필요하지 않다.

3월 26일 시위는 굉장했다. 그러나 이런 시위 한 번으로 캐머런 보수당 총리와 그 일당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 보수당의 긴축 정책을 저지하려면 대중 시위뿐만 아니라 수십만 노동자들이 참가한 파업이 필요하다.

교사와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일부 노조들은 6월에 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일 계획을 내놓았다. 이들 노조에 가입한 교사, 공무원, 대학 강사 들의 수는 7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의 파업은 좋은 출발이 될 것이고 정부에 상당한 압력을 넣을 것이다. 이미 연립 정부는 대규모 시위를 보고 분열하고 있다.

영국 정부를 굴복시키려면 UNITE, 공공서비스노조(UNISON), 영국일반노조(GMB) 등 초대형 노조들이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호소해야 한다. 이들 조합원 5백만 명이 파업을 벌이면 연립 정부의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고, 심지어 그것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

리비아 공습 반대는 인기 없는 주장이 아니다

리비아에 대한 군사 공격이 시작되면서 홍대입구와 신촌 거리에서 <레프트21> 거리 판매는 이전보다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것은 튀니지에서 중동 혁명이 처음 시작됐을 때와 이집트 혁명이 무바라크를 몰러나게 했을 때 신문이 인기를 끌던 것과는 다소 대조적인 현상이었다.

당시 거리판매 조직자가 내렸던 평가는 다국적군의 리비아 폭격 반대 주장이 인기 없는 것이고, 그에 따른 신문 판매 급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건대입구역에서는 여전히 신문이 많이 판매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연세대학교 공개 판매에서도 리비아 폭격 반대를 주되게 주장했지만 신문 판매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서부지역 거리 판매가 줄어든

이유는 리비아 폭격에 대한 사람들의 혼란도 있었겠지만, 주되게는 우리 자신의 정치적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이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는 젊은 학생과 청년들의 상당수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한 짓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강도를 막기 위해 도둑놈들에게 호소하는 심정으로 카다피에 반대해 서방 개입을 지지했을 것이다.(물론, 진정한 강도는 서방의 제국주의 국가들이다.)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리비아 폭격을 지지하더라도 그것이 중동 혁명에 반대하고,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우파적 입장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다수는 중동 혁명을 지지하기에 폭격도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제국주의 국가의

군사 개입이 혁명에 도움이 된 적이 없기에 이 입장은 모순된 입장이다. 이 모순된 입장에 잘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람들의 의식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리비아 폭격 반대 주장이 인기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한 것은 판매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도 넘어야 할 산은 많았다. 알 카에다에 대한 반감과 탈레반에 대한 혐오 등이 겹쳐 사람들의 태도는 상당히 모순돼 있었다. 하지만 참을성 있게 아프가니스탄 전쟁 반대 운동을 조직해 결국 우리의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됐다.

물론, 지금은 진보단체들도 혼란을 겪고 있어 운동 건설은 녹록

치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참을성 있게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고 설득한다면 우리 주위에 청중을 모을 수 있다.

리비아 공격에 대한 제국주의의 추악한 실체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존 입장을 철회할 수 있다. 그리된다면, 우리의 주장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올바른이 더욱 분명히 입증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우리는 다음 거리 판매를 준비했고, 결국 평균 판매 부수를 뛰어넘는 판매를 할 수 있었다.

신문 판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치적 자신감 상태다. 이번 경험은 이런 자명한 사실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였다.

안병철

현대차 노동자와 나는 소중한 토론

‘다함께’ 울산 사무실 개소식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나는 대화는 나에게 소중한 경험을 안겨줬다.

이날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중동 혁명 등을 토론하며 늦게까지 남아 있던 나는 젊은 노동자 두 명과 중동혁명 등 정치 쟁점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다.

이들은 단지 작업장 문제만이 아니라 이집트 혁명과 리비아 혁명에도 관심을 표했다. 또 “혁명으로 새로운 사회가 탄생해도 스탈린이나 북한처럼 되는 것 아니냐?”, “인간 분성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는 불가능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나는 이 노동자들 자신을 포함한 현대차 동지들이 파업 때 보여줬던 연대 정신과 이타심 그리고 일본 민중의 고통에 연대를 보이는 한

국 민중의 모습을 예로 들며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건설된 노동자·병사의 평의회(소비에트)의 예를 들며 이런 혁명적 기구가 진정한 의미의 혁명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하지만 내전과 스탈린의 반혁명에 의해 이것이 파괴된 과정 등을 차분히 설명했다.

그리고 혁명이 패배하지 않으려면 야만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조직된 소수, 즉 혁명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함께 가입을 권유했다.

그리고 약 1주일이 지나 이 자리에 있던 한 동지와 또 다른 동지가 다함께 울산 지회 회원들과 토론 끝에 다함께에 가입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김우용 기아자동차 노동자

서울교대에서 진행한

청소 노동자 연대 활동

나는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의 진보 동아리 ‘온새미로’의 회장을 맡고 있다. 온새미로에서는 지난 3월 30일 홍익대 청소 노동자를 초청해 ‘오늘날 비정규직 현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교대 학생들에게 간담회 홍보를 하면서 당시 파업 중인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청소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지지 메시지를 받았다.

이틀간 점심시간 30분 동안 받았는데, 60여 명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전교생이 2천 명이 안 되는 대학에서 무척 짧은 시간 동안 받은 것을 감안하면 좋은 결과였다.

지지 메시지는 서울교대 게시판에 대자보로 붙이고 연세대 점거농성장에도 보냈다. 연세대 노동자들은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한다”면서 안 떨어지게 테이

프를 여러 번 두르며 기뻐했다.

간담회도 반응이 좋았다. 간담회에는 동아리 회원이 아닌 신입생 세 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참여했다.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 전에 억압받고 힘들었던 생활에 대해 얘기하며 “노조에 가입하고 투쟁을 한 이후 당당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지하는 게 싸우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서울교대에 서도 진보적 활동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이 직접 벌어지지 않은 학교라도, 이번 간담회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동자·학생 연대를 건설할 수 있다.

김동욱 서울교육대학교 ‘다함께’ 회원

고난받은 이들과 함께한 향린교회 신자들은 죄가 없다

이명박을 장로로 ‘모시고’, 북한의 김부자 뺨치는 ‘목사 세습’을 하며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주류교회와 달리, 향린교회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쫓불시위, 기륭노동자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등 사회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 활동에 참가해왔다.

그래서 주류 기독교의 부패 행태에 실망하거나 사회 정의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향린교회를 선택해왔다.

3월 31일 향린교회 임보라 목사와 다른 교인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회사 측의 탄압에 맞서 3년 넘게 투쟁을 벌이고 있는 재능교육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1인시위를 종각역에서 했다.

그런데 역사직원이란 자가 와서 1인시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후에도 재능교육이 1인시위

를 몰래 촬영해 온 것이 드러났다. 이것도 모자라 향린교회 목사에게 “신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위가 계속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조현정 담임목사님이 설교시간에 이 사실을 폭로하자 많은 신자들이 분개했다. 향린교회는 신자들이 집회에 나갈 때 즐겨 부르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라

는 노래가사처럼 오히려 계속해서 1인시위를 할 예정이다.

향린교회 신자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탄압을 받아왔지만, 그 활동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없다.

나도 한 사람의 신자로서, 노동자 탄압도 모자라 약자에게 연대하는 교회 신자들을 탄압하는 재능교육의 시도에 반대할 것이다.

김재원

“<레프트21>을 기다렸어요”

나는 교사다. 그동안 학교에서 주변 선생님들에게 <레프트21>을 판매해 왔다.

“안 그래도 중동이 어떻게 됐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새 신문 나왔어요”라며 가방에서 주섬주섬 <레프트21>을 꺼내다 사서 선생님이 열른 신문을 가져가 펼쳐보면서 하는 말이다.

“선생님, 저는 이 신문 읽기 전에는 뉴스를 안 봤어요. 관심도 없고, 뭐라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뉴스가 들려요. 참 신기해요, 요즘 뉴스를 열심히 듣고 있어

요. 남자 친구도 저랑 같이 꼼꼼하게 봐요.”

지난해 3월 세계여성의 날 특집 기사가 실린 신문부터 1년 동안 나에게서 신문을 샀던 교무 보조의 말이다.

몇 년 동안 신문 판매를 하면서 힘들고 고민스러웠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 둘에게 신문을 판매할 때 걱정됐던 것은 그저 나와의 관계 때문에 신문을 사는 것이 아닐까, 그저 버려지는 신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신문을 건

네주면서 한 두 가지 기사만 소개하고 팔았기 때문이다. 4개월 전 토론을 시도했으나 “너무 어려워요”라는 말만 들었다.

가만히 생각하니 “어렵지만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라는 그들의 말은 1백 퍼센트 진심어린 말이였다. 그들은 기사를 진정으로 꼼꼼하게 읽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독자였다. 팔기만 하고 토론을 하지 못한 탓에 그들을 내 마음대로 재단했던 것이다.

이번 경험으로 신문 판매에 자신감이 생겼고 교훈을 얻었다. 끈

기 있게 판매를 해야 하고, 현재의 뜨거운 쟁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판매로 끝내지 말고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토론을 해 신문에 대한 반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신문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로 했다. 그들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설렌다. ‘이전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토론해 봐야 자극을 받고 성장할 수 있다’는 한 다함께 회원의 말이 무슨 뜻인지 드디어 알게 됐다.

박해성

다함께 공개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대학생다함께 마르크스주의 포럼

다함께 서울 동부 공개 포럼

여성해방과 마르크스주의

연사: 최미진 (<레프트21> 기자)
일시: 4월 13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여성능력개발원 3층 1강의실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447-0397, 010-9910-2021

다함께 서울 중북부 공개 포럼

임금 인상 투쟁의 정치경제학 —

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지지해야 하는가?

연사: 박성환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노동조합팀장)
일시: 4월 21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해화역 4번 출구 도보 3분, CGV 옆 건물)
참가비: 2천 원
문의: 070-8113-8541, 010-8033-7822

부산지역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제국주의와 중동 - 서방 개입의 역사

연사: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
일시: 4월 21일 (목) 오후 6시
장소: 부산대학교 (강의실 웹사이트 추후 공지)
문의: 010-5331-1968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atgwestmail@gmail.com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at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nambu_forum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70-8113-8541 jball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ibforum
서울 종로구 송인2동 201번지 13호

다함께 서울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forum
서울 광진구 중곡4동 93-49 2층

국립대 법인화

높은 반대 정서를 투쟁으로 연결해야

얼마 전 서울대에서는 노동자와 학생 3백여 명이 비민주적인 법인화 추진에 항의하며 총장실 앞에서 농성을 했다. 법인설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총장이 거절하면서 농성은 12시간으로 길어졌다.

그러자 보수 언론들은 “총장 12시간 감금 서울대 노조 엄단하라”고 했고 서울대 학장단도 “모든 문제는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노동자·학생을 비난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대화” 없이 법인화를 밀어붙인 쪽은 정부와 대학 당국이다. 지난해 말 서울대 법인화 법은 단 1분 만에 날치기 처리됐고 70퍼센트가 넘는 노동자와 학생의 반대에도 서울대 당국은 법인화를 강행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대 당국은 노동자들이 법인설립준비위원회에 참가해 의사를 표현하는 것조차 가로막고 있다. 이런 법인화 추진에 항의한 행동은 조금도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봐도 법인화의 실체가 드러난다. 전 신한국당 대표이자 <중앙일보> 고문인 이흥구, 전 검찰총장 송광수, 성균관대 이사장 서정돈, CJ그룹 회장 등 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온통 보수적이고 친기업적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런 자들이 주도하는 법인화는 노동자와 학생들에게 큰 고통을 강요할 것이다. 특히 노동자들은 법인화가 되면 공무원 신분이 법인 직원으로 바뀌며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임금이 줄어들고 노동조건은 후퇴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다.

이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은 법인설립준비위원회에 참가해서라도 고용승계를 약속받고 싶어한다. 이미 법안이 통



사진 출처 (서울대자침)

지난해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된 직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규탄 집회 법은 통과됐지만 지금부터 투쟁하면 늦지 않다.

과된 마당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깔려 있다.

그러나 법인화 자체가 대학들의 돈벌이 추구를 강화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기구에 포함된다고 해서 법인화의 본질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

위원회는 현재 법인설립준비위원회 참가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도 법인설립준비위원회 참가를 반대하며 “법인화법 폐기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런 입장이 옳다. 법인화 자체를 반대하면서 투쟁하는 게 노동자·학생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길이다. 비록 법이 통과됐더라도 결코 늦은 게 아니다.

노동자·학생 투쟁의 역사를 돌아보면 투쟁을 통해 법을 무력화시키거나 법안 자체를 폐기한 경우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부터 법인화를 막아내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가 서울대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국립대 법인화를 확대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미 인천대는 법인화 법안을 국회에 상

정해 둔 상황이고 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도 법인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익성에 따른 대학 운영을 낳을 국립대 법인화는 노동자, 학생들에게 큰 고통을 줄 것이다. 노동자들은 임금과 연금 삭감, 고용불안과 정리해고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고,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과 비인기 학과 구조조정, 학내 민주주의 후퇴, 억압적 학사행정 강화 등을 겪게 될 것이다.

교수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 법인화를 하면 연봉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법인화는 대다수 교수들의 처우도 열악하게 만든다. 일본 사례를 보면 법인화 이후 교수 연구비가 감소했고 연금도 공격당했다. 신분도 불안정해졌다.

국립대 법인화는 사립대의 시장화도 더욱 부추겨서 대학 구조조정과 기업 입맛에 맞는 대학 재편 등이 더 속도를 낼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여론은 매우 크다. 얼마 전 부산대 교직원 8백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7.1퍼센트가 법인화를 반대했다. 38개 국립대 구성원 3천7백2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4.3퍼센트가 법인화를 반대했다. 부산대에서는 4월 5일 학생 6백여 명이 모여서 법인화 반대 집회를 했다.

따라서 이런 반대 정서를 바탕으로 강력한 법인화 반대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인내심을 갖고 끈질기게 법인화의 실체를 폭로하며 사람들을 설득하고 투쟁을 건설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이명박 정부의 법인화 추진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

정선영

자본주의와 복지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편집자] 무상복지와 자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를 내세우고 이명박은 ‘복지 포폴리즘’을 비난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관된 좌파적 관점이 필요한 때다.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

-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 ③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 ④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 ⑤ 좌파적 대안

1998년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제3의 길>이라는 이름의 책을 내놓았다.

기든스는 세계 자본주의가 ‘지식기반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했고,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맞춰 사회민주주의의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제3의 길’ 전략이다.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길도 아니고, 1970년대 후반부터 득세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길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제3의 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천에서 ‘제3의 길’ 전략은 명백히 신자유주의의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1996년에 집권한 영국 노동당 토니 블레어 정부는 이미 이른바 ‘신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당의 우경화를 꾀하며 전임 보수당 정부들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던 터였는데, 사실 ‘제3의 길’ 전략은 이런 정책을 이론화해 표현한 것이었다.

기든스 자신도 “좌파는 이제 시장을,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의 기업의 역할을,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투자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로 ‘제3의 길’ 전략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래서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의 최선의 이데올로기적 외피” 노릇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제3의 길’에는 “신자유주의적 우파의 정책들이... 서둘러 숨겨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제3의 길’ 전략이 지향하는 복지

국가 모델이 사회투자국가다.

사회투자국가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 지출도 투자적 성격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즉, 고용이 너무 ‘안정’돼 있지만 하면 기업들의 이윤이 압박을 받으니 ‘유연성’을 도입해야 하고(자유로운 해고, 비정규직 고용 확대), 복지 혜택을 받는 만큼 개인도 노력해야 하고(실업 급여의 대가로 구직 활동 증명과 저임금 일자리 강요), 복지를 너무 많이 주면 근로 의욕이 감퇴하는 등 ‘복지병’이 생기니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해야(급여 축소, 보편주의 폐기, 엄격한 자산조사 시행)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사회투자국가는 ‘지식기반경제’에서 핵심인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렇 때조차 교육은 권리가 아니라 ‘투자’의 일환이었으므로 문제를 낳았다.

연구 성과에 따라 국고 지원에 차등을 두면서 대학 간 경쟁이 심화했다. 이는 교수 간, 교원 간, 학생 간 경쟁 심화로 이어졌고, 학내 민주주의도 후퇴했다.

이처럼 1990년대 영국에서 사회투자국가의 논리는 현실에서 노동계급과 저소득층에 주는 복지를 줄이는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제3의 길’, 사회투자국가 정책을 도입했다. 영국과 달리 한국의 복지가 워낙 퇴조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한편

에서는 일부 복지 지출을 늘리는 효과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고 연금을 절반 가까이 삭감했다.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고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 되레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재 국민참여당의 유시민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사회투자국가 정책을 거의 그대로 계승해 주장한다.

문제는 진보진영의 일부 논자들도 사회투자국가의 논리를 일부 수용한다는 점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대표적인데, 복지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사회투자국가 논리와 다르다.

유용한 무기?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 복지 확충은 ‘현실적으로’ 지배 엘리트의 일부 분파까지 설득해야 가능하고, 그러려면 복지 지출이 경제성장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는 사고가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진보 정당이 아직 독자 집권할 만큼의 세력이 안 되는 한국 상황에서는 복지 확충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서 사회투자국가의 논리가 유용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사회투자국가론은 경제성장 논리를 받아들인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복지를 확충하는 데서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없다.

첫째, 경제성장 논리를 받아들이면 ‘복지병’, ‘복지 의존성’ 등 복지 확충에 반대

하는 주장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어렵다. 이는 불필요하게 요구 수준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국민참여당은 “시민들의 ... 모럴 해저드”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제안조차 반대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이성이 교수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를 이끌고 있는데 그는 그리스의 재정 위기가 ‘과도한’ 복지 지출 때문이라는 보수파의 논리를 일부 수용했다.

둘째, 좀더 중요하게는, 복지를 대폭 확충하려면 노동계급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데 경제성장 논리는 이윤에 타격을 주는 노동자 투쟁을 균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이나 스웨덴 복지국가의 역사를 봐도, 한국 역사를 봐도 복지가 대폭 확충되거나 개선되는 배경에는 강력한 노동자 투쟁이 있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 위기 시기에 지배계급은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복지를 확대할 리 없다.

지배계급의 거짓말과는 달리 복지를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돈은 충분하다. 부자들을 위해서만 쓰이는 돈을 노동자·민중을 위한 복지 확대로 이전시키려면, 경제성장을 약속하며 저들을 설득하려 할 것이 아니라 이윤 체제를 위협하며 단호하게 투쟁해야 한다.

차승일

Report@left21.com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4월 18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현대차

강력한 임단투를 건설해야 한다

임금·단체협약 투쟁

현대차 사측이 비정규직에 이어 정규직도 공격하기 시작했다.

사측은 4월 1일부터 2백35명의 정규직 노조 전임자 중 법적으로 허용된 24명만 인정하고, 대의원·현장위원 등의 근무 시간 중 노조 활동도 허가제로 강제하겠다고 했다.

경총도 기아차·GM대우차 등에서 사실상 무력화된 타임오프제를 만회하고자 현대차 사측을 응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대차에서 손쉽게 타임오프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너무 낙관할 수만은 없다.

현대차 사측의 공세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열망을 억누르려는 것이기도 하다.

현대차가 해마다 최대 실적을 갱신할 정도로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는 상당하다. 더구나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 때문에 이런 바람은 더 커졌다.

따라서 곧 시작될 임단투(임금·단체협약 투쟁)에서 사측의 노조 탄압 공세를 막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싸울 필요가 있다. 현대차의 임금 인상은 사내 하청·부품업체 노동자들뿐 아니라, 전 산업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번 임금 인상 투쟁에선 무엇보다 기

본급을 대폭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급이 올라야 상여금, 퇴직금까지 올라가고 산업·특근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급속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대로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동일 액수의 임금 인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간연속2교대제도 임단투의 한 켠점이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야간근로를 없애려면 노동 강도 강화·임금 삭감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이 시급하다.

올해 현대차 임단투는 여러모로 중요하다. 이 투쟁이 승리하려면 노동자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관건인데, 최근 마무리된 울산 1공장 투쟁이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 줬다.

울산 1공장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를 높이고 비정규직·정규직 고용을 위협한 사측에 맞서 두 달 동안 강력한 투쟁을 벌였다. 지난해 비정규직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한 대의원 활동가들이 주축이 돼 신차 생산을 중단시켰다. 이 투쟁은 <월스트리트저널>이 “강성노조 명령이 안 떠난 현대차”라며 격정할 정도로 사측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그리고 그 덕분에 비정규직 해고를 막아낼 수 있었다.

물론, 정규직의 강제 전환 배치를 수용했고 노동 강도 강화를 낮추지도 못했다. 사측의 압력에 흔들린 1공장 사업부 대표가 민주적으로 대의원·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합의해 버린 탓이다.

사측이 1공장을 공격한 것은 임단투 등을 앞두고 전투적 활동가들을 겨냥한 것이기도 했는데, 이경훈 지도부는 물리적인 충돌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투쟁이 아닌 중재에 매달렸다.

그 점에서 1공장의 다른 부서·사업부 활동가들의 실질적 연대가 중요했지만 이것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민주파 현장조직·활동가 들은 이런 칸막이 현상을 극복하고 임단투의 구심으로 나서야 한다. 4월 18일 현대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할 수 있도록 제기해야 한다.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투쟁 연대도 결의해야 한다. 탄압과 집회 방해 속에서도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임단투와 결합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의 노조 통합도 필요하다. 노조 통합은 정규직 조합원·활동가들과 단결을 강화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모승훈

노조 통합이 단결에 더 이롭다

지금 현대차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이다.

활동가들 사이에선 노조 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이 갈리는 듯한데, 나는 투쟁을 통해 단결하는 것과 노조를 통합해 단결하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며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만난 현대차 비정규직 투사들 중 일부는 “지금 노조를 통합하면 이경훈 집행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비정규직이 단결해야지 정규직에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되면 당연히 정규직 노

조 조합원이 되는데, 그걸 좀 빨리 하자는 것이 왜 비정규직 투쟁을 약화시키는가?

일부 동지들은 이경훈 집행부에 대한 불만 때문에 노조 통합에 반대하지만, 이것은 정규직 노동자·활동가들과 단결하기 위한 통합이다.

내가 있는 기아차에선 정규직·비정규직 노조가 통합됐다. 그 이후 현대차에서처럼 신차 도입이나 UPH(생산라인 속도 조절) 조정 협상 때마다 비정규직 수십 명이 잘리는 일은 없어졌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정규직과 똑같이 조합비를 내고 투표권을 행사하니, 비정규직 투쟁을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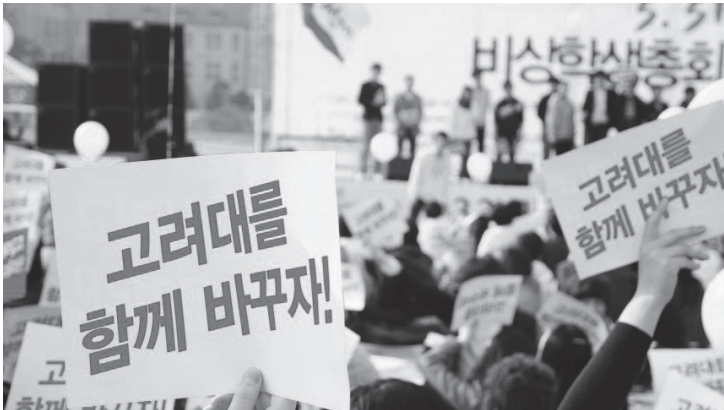
난하던 우파 세력들도 대의원대회나 공개적인 홍보물 등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한다.

노조 통합은 지금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에 중요한 한 고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정규직 노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현대차 노동자운동의 지각변동을 부를 계기가 될 수 있다.

노조조합의 기본은 크게 단결하는 것이다. 투쟁할 때는 정규직과 단결을 주장하면서 조직적 통합에는 반대하는 것은 모순일 뿐 아니라 설득력도 떨어진다.

김우용 기아차 지부 소속 급속노조 중앙위원

고려대



(왼쪽부터) 고려대 학생들

3월 31일 학생 총회

임금은 올렸다 이제 등록금을 내리자

3월 31일 고려대에서 6년 만에 비상 학생 총회가 성사됐다. 1천5백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인하와 청소 노동자 파업 지지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등록금은 내리고 임금을 올려라’ 하고 쓴 빨간색 팻말을 동시에 드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비상 학생 총회에는 파업 중인 청소 노동자들도 함께했다. 29일부터 청소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점거파업을 시작한 덕분에 학생 총회가 성사된 것이기도 했다.

총회에서 거점 농성을 중심으로 투쟁을 지속하자는 안건이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학생들은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4·18기념관으로 행진해 가서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학생들은 학교 당국에게 요구를 수용하라고 했으나, 학생처장은 ‘2~3개월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 당국이 대화에 나설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기로 했다. 청소 노동자들도 이 날 저녁에 같은 건물에서 진행 중이던 노사 교섭을 기다리며 학생들과 함께 연좌 농성을 했다.

등록금 인하와 임금 인상 요구를 결합한 노동자·학생들의 단호한

투쟁은 즉각 학교 당국을 물러하게 했다. 절대 양보할 수 없었던 용역업체는 학생·노동자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청소 노동자들의 시급을 4천6백 원까지 올려주겠다고 물러섰다.

비상 학생 총회가 성사되고 청소 노동자들이 고려대 당국의 양보를 얻어내자, 학생들도 자신감을 얻었다. 학생들은 김병철 총장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며 4월 4일 아침부터 총장실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고려대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해 농성에 돌입한 것은 2004년 이후로 처음이다.

김병철 총장은 2월 말에 취임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본관 점거 파업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해, 김병철 총장은 취임 후에 총장실에서 제대로 일도 못해 봤다.

학생들은 총장실을 투쟁의 구심점으로 삼아 다양한 투쟁을 지속하려 한다. 4월 6일 학내 집회를 시작으로 대중적인 항의 행동을 키워갈 예정이며, 이후에도 농성장에서 영화 상영, 강연회 등 다양한 농성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지지와 참가를 늘릴 것이다.

김영익 다함께 고려대 모임

인하대

본관 점거 —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학생 총회로 1만 8천 학우들이 많은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학우들이 여지껏 모아 준 마음 저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전은영 인하대 부총학생회장이 말했다.

올해 인하대학교는 등록금이 3.9퍼센트 인상됐다. 등록금이 동결됐던 지난해에도 적립금은 1백84억 원이나 늘었는데 학교가 적자 운운하며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3월 30일 2천9백여 명이 모이고 2천46명이 위임장을 써 학생 총회가 성사된 이후, 인하대학교 학생들은 본관 2층 전체를 점거하고 투쟁하고 있다.

총장실은 총학생회, 부총장실은 공대 학생회 등 단과대 학생회들과 동아리연합회가 학교 임원들 대신 본관 2층을 차지했다. 학교 측은 학생 총회 전달 집을 다른 곳

으로 다 옮겨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계속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총학생회는 앞으로 본관 2층에서 시험 기간에는 열람실을 운영하고, 야구 상영 등을 해 많은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게 점거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후문과 쪽문에서는 정부에 등록금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입법 청원에 쓰일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시험 기간이 끝난 4월 말에는 학교에서 자전거행진과 마라톤 대회도 할 예정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 인상 반대 행동이 계속될 예정이다. 그래도 학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5월 축제 기간에 다시 한번 대규모로 학생들이 모여서 등록금 인상 철회를 외칠 것이다.

오선희

금호타이어 노조

자신감을 회복하고 투쟁에 나서다

노조 지도부의 굴욕적인 양보로 투쟁을 접어야 했던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금호타이어 노조 고광석 집행부는 그룹 부도 위기 속에서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조합원들을 배신하고 ‘노예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 10퍼센트가 삭감됐고, 워크아웃 기간에 추가로 임금 5퍼센트와 상여금 2백 퍼센트가 삭감됐다. 또 비정규직이 늘고 고용 불안도 커졌다.

반대로 곧 망할 것처럼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사측은 지난해 2조7천20억 원의 매출과 2천4백9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본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른 현장 노동자들은 고광석 집행부를 탄핵하고 좌파 노조 지

도부를 세웠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 노조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약이 모두 무효라고 선언하고 정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 인원 대비 83.79퍼센트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투쟁을 결의했다. 3월 25일엔 하루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자 사측은 공장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조합원들에게 ‘불법 파업 불참 약속서’ 서명을 강요하는 등 탄압에 나섰다.

이에 노조는 즉각 ‘파업 불참 약속서’ 작성을 거부하고 직장폐쇄 철회를 촉구하며 파업을 지속했다.

결국 금호타이어 사측은 일주일 만에 직장폐쇄와 약속서 강요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고, 노동자들은 당당히 정문으로 출근할 수 있었다. 작지만 소중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다. 사측은 여전히 정식 교섭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해 빼앗긴 것을 되돌리는 투쟁을 실질적으로 벌여야 한다. “사측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김봉갑 지회장의 발언이 절대 빈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필요할 때 공장 점거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길 주저해선 안 된다. 사측의 단호한 강수에 주춤하지 말고 더한 강수로 맞받아쳐야 한다.

그래서 지난해의 후퇴를 되돌리게 된다면, 경제 위기 고통전간에 신음하는 전국 노동자들의 투지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박성환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 5만 원
2년(52개 호) | 10만 원

www.Jeff21.com | left21@left21.com | 02-777-2792
계좌번호(명의: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레프트21

등록금 인상 반대 학생 총회 성사와 점거 농성 돌입

학생들의 투지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정선영

등록금 인상에 맞선 학생 투쟁의 불길이 뜨거워지고 있다.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인하대학교, 서강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곳곳에서 전체학생총회가 성사됐다. 서강대는 22년 만이고 나머지 대학들도 5~6년 만에 수천 명이 모여 학생 총회가 열렸다.

경희대는 투쟁의 힘으로 등록금을 동결했고, 다른 학교들도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예년에는 전체학생총회가 등록금 투쟁을 마무리하는 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전체학생총회를 계기로 본관 점거, 수업 거부 등이 벌어지고 있다.

“교무처장실, 사무처장실, 총장실, 부총장실 등 본관 2층을 다 점거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동결시킬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전은영 인하대 부총학생회장)

고려대도 총장실을 점거했다. 이화여대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채플 수업을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다. 덕성여대도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삭발을 하고 등록금 인상과 비리 재단 복구에 맞서 천막 농성을 하며 투쟁하고 있다. 서강대도 장학금을 올려 주겠다는 학교 측의 타협안을 거부하고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에 분노가 크다”는 것이 총회를 성사한 학교 학생회 활동가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실제로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5년 새 35배나 늘었다.

로또 복권

학자금 대출 서류와 로또 복권 두 장을 유서 대신 남겨두고 죽은 강릉의 한 대학생처럼 안타까운 일이 학기마다 반복된다.

10년간 갑절로 오른 등록금은 노동자 가정에도 커다란 부담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등록금 인상을 자신의 문제로 여긴다.

실제로 등록금 인상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다름없다.

사립대학들은 해마다 등록금 인상분 총액의 갑절이나 되는 돈을 적립금으로 쌓아 그 액수는 현재 10조 원이나 된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 재정을 줄이



김민준

전체학생총회를 성사한 성과를 이어 대학 당국에 맞선 투쟁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고 대학 기업화를 추진하며 대학들의 돈벌이를 도왔다.

물가인상 1.5배 내로 등록금을 올려도 된다는 정부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대학들에게 등록금 인상의 명분만 줬다.

극심한 교통과 경쟁 압력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소외감과 체념에 빠지기도 했지만 최근의 일들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저항에 나설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학생들은 자신감을 회복해 왔다. 촛불운동과 경제 위기를 겪으며 대학생들의 의식이 급진화했다. 지난 몇 년간 운동권 총학생회의 당선이 늘었고 특히 지난해는 서울 주요 대학들에서 대거 운동권 총학생회가 당선됐다.

또 동국대, 홍익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에서 연이어 청소년 노동자들이 강력한 투쟁을 통해 성과를 거둔 것도 학생들의 자신감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분열하며 깊은 레임덕에 빠져드는 이명박 정부의 위기도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더 큰 대중적 행동을 건설해서 등록금 인상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막아야 한다.

어떻게 투쟁을 확대할 것인가

대학들과 정부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이 적립금 쌓기만 한 해도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다. 현재 대학들이 쌓아 둔 적립금은 무려 10조 원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가 한 해 동안 부자들에게 깎아 준 세금 13조 원이면 등록금 동결과 학자금 부채 탕감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 당국이 양보하도록 투쟁을 확대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등록금넷 등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설치를 주요 과제로 여기며 투쟁 확대에 주력하지 못한 점이 있다.

등심위 내에서 협상에 매달리다 보니 등록금 투쟁을 건설할 시간을 까먹게 됐고, 학교 당국들은 등심위를 요식 행위로 여기며 일방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고지해 버렸다.

실제로 고려대의 한 학생회 활동가는 “등록금 인상이 예고됐던 시점부터 서명 운동이나, 본관 항의방문, 항의 전화 등을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등심위에 집중하면서 투쟁 건설이 많이 늦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경희대 총학생회는 1월부터 등록금 인상 반대 댓글 달기와 문자 보내기 등을

하며 학생들을 조직했고, 그 결과 대중적인 운동을 건설해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었다. 동국대에서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점거파업 승리에 고무받은 학생들이 입학식 단상 점거 등 행동에 나서며 학교측의 양보를 얻어냈다.

무계중심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대중투쟁 건설에 확실한 무계중심을 뒀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 한대련과 등록금넷은 대정부 투쟁을 다소 일면적으로 강조하면서 대학 당국에 맞서는 투쟁을 소홀히 하고, 대정부 투쟁조차 대중 투쟁보다는 선거를 통한 변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4월 2일 대학로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대학생 대회’에서 연단 발언들은 각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을 더 고무하기보다 민주당 등 야당이 연대해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투표로 바꾸자는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철회시키고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힘은 대중 투쟁에 있다.

지금은 학생 총회의 성과를 이어 대학 당국에 맞선 투쟁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경희대처럼 승리할 수 있으려면 학생들의 지지를 대중적인 점거 등 학교를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행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청소년 노동자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청소년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본관 점거파업을 했고 이것이 임금 인상이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김지윤 고려대학교 문과대 학생회장)

2000년도에도 경희대를 시작으로 전국 열두 대학에서 점거 농성이 벌어졌다. 당시에 “한양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일부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이에 본관 전체를 잠그고 완전 봉쇄해 학사 업무 전체가 일주일 넘게 마비”된 사례가 있다.(한국대학신문)

주요 대학들에서 이런 투쟁이 벌어지고 승리한다면 대정부 정치 투쟁을 위한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다.

또 그런 투쟁은 임금인상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지를 고무할 수 있다.

지난해 등록금 인상에 맞서 영국 학생 수만 명이 투쟁했던 것이 올해 노동자와 학생 50만 명의 내집 반대 투쟁으로 발전했듯이 말이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지금, 학생들의 투쟁은 더 큰 투쟁의 방아쇠 구실을 할 수 있다.

맑시즘2011

일시 : 7월 21일(목) - 24일(일) | 장소 : 서울 (추후 공지)

주최: 다함께 | 문의: 02-2271-2395

맑시즘은 11번째 열리는 국내 최대 진보 포럼입니다. 해마다 국내외 활동가와 진보 인사들이 60여 개의 알짜배기 주제로 강연하고, 1천5백 명에 이르는 노동자·학생·청년 참가자들이 치열하게 청중 토론을 벌입니다.

아랍 혁명이 2011년 상반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배자들은 그것이 아랍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경제 위기의 심화 속에서 시작된 혁명의 제막,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진정한 대안은 무엇이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치열한 토론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요 연사 |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WP의 중앙위원이자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 1968년 반란으로 각성한 이래 42년 동안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근거한 반자본주의 운동에 헌신해 왔다. 국내에 번역된 책만도 《무너지는 환상》,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반자본주의 선언》,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제3의 길은 없다》, 《자본주의의 대안과 사회주의의 가치 논쟁》 등이 있고, 이 밖에도 수많은 저작이 있다.